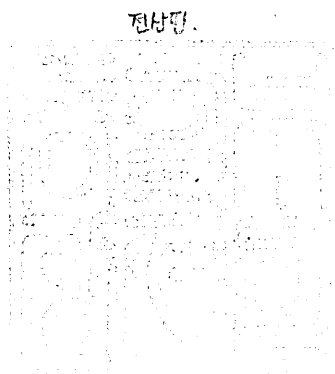


統一教育支援法 制定 參考資料

統一教育關聯 論議 資料集



統 一 院

본 자료는 '94년 이후 '97년 8월까지 개최되었던 통일교육과 관련한 22차례의 주요 세미나·워크숍에서의 논의를 요약·정리한 것이며,

본 자료집에 수록된 내용은 발표자의 개인적인 견해일 뿐, 당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목 차

1. 통일교육의 전개 / 1
 2. 통일교육의 시대구분 / 6
 3. 통일교육의 개념과 범주 / 9
 4. 통일교육의 목표와 방향 / 11
 5. 통일교육 강화의 필요성 / 16
 6. 통일교육의 법제화 / 17
 7. 통일교육과 민주시민교육 / 29
 8. 통일교육의 내용 / 35
 9. 통일교육의 방법 / 41
 10. 청소년의 통일문제 인식 / 46
 11. 학교통일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 52
 12. 학교통일교육 개선방향 / 59
 13. 대학통일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 64
 14. 대학통일교육 개선방향 / 71
 15. 사회통일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 87
 16. 사회통일교육 개선방향 / 90
- # 원문목록 / 92
- 관련세미나 개최 현황('94~'97) / 97

1. 통일교육의 전개

김명기, “통일교육 접근(프로그램의 구성) 방안”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평화 통일교육연구위원회 주최 『대학에서의 통일교육 개선방안에 관한 세미나』 (’95. 9. 1)

□ 교육과정의 변화와 통일교육

- 정부가 통일교육 교과목을 설치하여 고등학교의 통일교육을 제도화한 것은 1969년 3월 1일 국토통일원을 설립한 이후의 일이다. 그 이전에는 1954년에 ‘제1차 교육과정개정’으로 반공교육이 ‘사회생활’이라는 정규교과과목의 일부로 취급되었을 뿐이다. 그 이후 1963년 ‘제2차 교육과정개정’으로 ‘사회생활’의 일부로 취급되었던 반공교육이 ‘반공·도덕’이라는 교과목으로 독립되었으나, 이는 정규 교과과목으로 되지 못하고 비정규 교과과목으로 취급되었다.

국토통일원이 출범한 이후 1970년 ‘제3차 교육과정개정’에서 종전의 비정규과목이었던 ‘반공·도덕’의 교과목을 ‘도덕’으로 바꾸어 반공교육을 ‘도덕’과목의 내용으로 편입시켜 버렸다. (p.48)

- 1970년부터 본격적으로 대학에서 ‘국민윤리’ 교과목을 설치하고 이를 교육법 시행령 제119조를 개정하여 교양필수과목으로 법제도화하여 규정하였다. 따라서 통일교육 교과목은 국민윤리에 포함되어 그의 일부로서 교양필수과목화 되게 되었다.

1977년 고조되기 시작한 통일교육 전담교사와 연구전문가 양성의 필요성에 부응하여 서울대학교는 학칙을 개정, ‘국민윤리학과’를 대학원 과정으로 설치하고, 뒤이어 1981년도에 들어와서 통일교육을 담당할 교사양성의 제도를 마련하였다. (p.49)

- 1980년대까지 통일교육을 위한 교과과정은 그나마 통일문제 연구와 전문가 양성에 초점을 두고 발전해 왔지만, 제6공화국에 들어

서면서부터 이러한 기반마저도 서서히 무너져 버리기 시작하였다. 1987년 제6공화국의 출범에 따라 1970년의 '교육법시행령'은 개정되고 동시행령 제119조에 의한 대학에서의 국민윤리 교과목이 교양필수과목에서 제외되어 버렸으며, 고등학교의 국민윤리 교과목도 '윤리'로 명칭이 바뀌어 버렸다. 더 나아가 현재는 각종의 국가고시과목과 공무원 임용시험 과목에서조차도 국민윤리 과목을 제외시키는 실정에 있다.

1990년대 들어 한반도의 통일여건 기반이 성숙되자 북한문제에 대한 객관적·체계적 인식의 틀을 확산하기 위하여 북한문제 관련 전문요원에 대한 사회적 수요충족을 메우기 위해 정부는 각 대학에 북한학강좌의 개설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대학교 등 68개 대학교에 224개의 강좌가 개설되어 있으며, 동국대·명지대 등에는 북한학과가 신설되었다. (p.50)

김갑철, "통일교육을 위한 교수양성 및 교재개발 방안"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평화통일교육연구위원회 주최 『대학에서의 통일교육 개선방안에 관한 세미나』('95. 9. 1)

□ 반공교육의 역사와 반성

- 북한정권과 그 보호세력(소련과 중국 등)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교육방침은 1948년 정부수립 이해 '반공'으로 일관해 왔고, 이러한 반공의 기조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그 강도를 달리하면서 전개되어 왔다. 예컨대 정부수립 이후 6·25 이전까지는 反共보다는 防共이라는 표현이 자주 사용되었고, 아울러 교육적 노력도 반대라는 적극적 관점에서보다는 공산주의의 침투를 막고 경계하자는 방어적 입장에서 전개되었다.
- 그러나 6·25를 겪으면서 반공은 멸공과 북진통일로 적극적인 시책을 펴게 되었으며, 이것은 전국민적 호응속에 전개될 수 있었다. 6·25 이전까지만 해도 防共과 反日은 그 비중이 비슷했으나, 6·

25를 겪으면서부터 방공은 반일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 1950년대가 적극적 반공/멸공의 시대였다고 하면, 4·19이후 1960~1961년의 시기는 반공의 기조가 통일에 대한 열망으로 압도당한 시기였다. (p.81)
- 그러나 1961년 ‘군사혁명정부’와 제3공화국 시대에 반공정책은 다시금 강조되고, ‘선건설 후통일’ 또는 ‘선건설 후민주화’ 신속한 근대화(공업화)가 공산주의를 극복하는 길이라는 개념적 구도를 정립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반공과 근대화의 정책기조가 계속되던 중에 1970년대 초반에 남북대화의 기운이 감돌게 되고, 급기야 ‘7·4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고 고위 당국자간의 상호방문이 이루어졌다.
- 남북대화의 시작은 일부 사람들에게 정부수립 이래의 전통적 ‘반공 교육관’에 대한 회의를 심어주기 시작했다. 이들은 ‘남북대화의 시대에 맞추어 반공교육은 바뀌어야 한다’는 반공교육 개선의 주장을 폈지만, ‘북한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 우리만 바뀌면 되는가’라는 종래의 반공논리를 고수하려는 입장에 압도당하곤 했다. (p.82)
-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러한 반공교육을 개선하자는 요구가 더욱 거세어졌다. 더욱이 198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는 통일논의가 다양하게 전개됨에 따라 반공논리와 통일논리를 상호 모순적인 것으로 보려는 견해까지 제시되었음. … 새로운 세대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통일교육과 반공교육이 서로 상충적일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하여 새로운 통일교육 논리체계로 대답해야 할 것이다. (p.83)

이기택, “대학에서의 통일교육운영실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평화통일교육 연구위원회 주최 『대학에서의 통일교육 개선방안에 관한 세미나』(95. 9. 1)

□ 『통일교육』의 태동과 1970년대 정치상황

- 『통일교육』이란 개념과 어휘가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초기 부터라고 할 수 있다. 통일교육이라는 개념 이전에는 『반공교육』이라는 개념과 어휘가 통일과 관련하는 어휘였다고 할 수 있다. 반공교육이라는 어휘는 주로 이데올로기적인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는 반면 통일교육이라는 개념과 어휘는 민족주의적인 성격을 가미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p.8)
- 통일교육이라는 어휘가 대학에서 교육적인 의미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특히 『닉슨독트린』 이후 혹은 『유신체제』 이후라는 1970년 초기의 정치상황과 깊은 관련을 가지면서 전개되었다.
- 그 하나가 과거와 판이한 성격의 남북한관계를 전개시킨 『7·4남북공동성명서』라는 『반공교육』이라는 어휘만으로는 분석하기 힘든 통일문제를 특히 진입하는 한국전쟁 이후의 세대에게 교육시킨다는 것이 그 시발점의 하나였다.
- 또 하나는 역시 『유신체제』와 깊은 관련을 가지면서 통일교육이라는 성격이 특징지워져갔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 『유신체제』를 북한의 공산주의체제와 대립관념으로 정립시키면서 유신체제의 타당성을 남북한관계라는 관점에서 통일교육으로 정립시켜간 과정이었기 때문이다. (p.9)

이서행, “통일교육 내용의 재정립방향”(주제발표), 통일원 주최 세미나 『통일환경 변화와 통일교육 발전방향』(’94. 12. 13)

□ 5공화국이후의 통일교육

- 통일교육이 그래도 본 의미에 가깝게 사회교육화되기 시작한 것은 5공화국 때이며 통일원이 중심이 되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유총연맹 등에서 통일안보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
- 그러나 6공화국을 맞이하면서 국민정신교육이 중단되고 사회교육 차원에서 통일교육은 전무하다시피 되었으나, 문민시대를 맞아서 는 새로운 통일정책과 통일환경을 위해 통일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인식하게 되었다. (p.41)

2. 통일교육의 시대구분

김명한, 중앙대학교 민족발전연구원 주최 통일정책대토론회 『민족동질화를 위한 통일교육의 방향』 토론자료 ('97. 1. 28)

- 반공교육('50-'85)→통일안보교육('86-'91)→통일교육('92년 이후)
(p.25)

최영표, “중·고교생의 통일교육 활성화방안”(주제발표), 민주평통 주최 1/4분기 통일정책포럼('96. 3. 26)

- 학교통일교육의 변천 (p.34)

구 분	교육과정 시기	북한관, 교과서 서술방향
반공교육기	~4차교육 과정기	적대관계, 대결의 상대로 인식
통일안보교육기	5차교육 과정기	대화와 대결의 상대로 인식
통일교육기	6차교육 과정기~ (1992년~현재)	대화와 포용의 상대로 인식, 적극적인 통일모색, 민족공동체 형성에 대비

김갑철, “통일교육을 위한 교수양성 및 교재개발 방안”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평화통일교육연구위원회 주최 『대학에서의 통일교육 개선방안에 관한 세미나』('95. 9. 1)

□ 초·중등교육과정에서 사상·이념교육의 명칭 변화

- 반공교육 : 1948-1980년대 중반
- 통일·안보교육 : 1986-1991 ('86년 제5차 교육과정에서 1을 2로 대체)
- 통일교육 : 1992-현재('92년 제6차 교육과정에서 2를 3으로 대체) (p.82)

이기택, “대학에서의 통일교육운영실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평화통일교육연구위원회 주최 『대학에서의 통일교육 개선방안에 관한 세미나』('95. 9. 1)

- 첫째, 1950년(한국전쟁)~1970년(남북공동성명서 전후):반공교육기
- 둘째, 1970년~1980년중반 : 통일교육기
 - * 남북한관계에 ‘평화공존’이라는 정치원칙이 도입되는 시기. 물론 평화공존은 ‘다른 체제간의 공존’을 의미함으로써 그 기초에는 북한의 공산주의체제를 반대하는 반공이데올로기가 엄격하게 깔려 있었으나, 동시에 ‘하나의 조선’정책 즉 ‘전조선의 공산주의화’라는 원칙에 반대하면서도 동시에 남북한관계가 현실화하는 단계로 진입하게 되는 시기임.
- 셋째, 고르바초프현상 이후(1985년)~현재 : 탈냉전의 통일교육기 (pp.9-11)

이상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평화통일교육연구위원회 주최 『대학에서의 통일교육 개선방안에 관한 세미나』 토론자료('95. 9. 1)

□ 이기택교수의 시대구분에 대한 이론

- 이기택교수의 논문중 통일교육의 3단계적 시기구분에는 큰 이의가 없으나 우리의 통일교육이 한국전쟁이 일어난 1950년부터 '반공교육'으로 출발했다고 한 점은 그 시점을 1948년 건국 전후부터로 봄이 더욱 타당할 것이다.

- 고르바초프가 당시 신사고외교의 기치하에 동서화해를 추구한 것은 사실이지만, 소련이 망한 것은 '91년 말이며, 한·소, 한·중수교도 '90년대 들어와서라는 점과 한반도에는 80년대 말까지도 냉전의 먹구름이 가시지 않았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80년대 중반부터 '탈냉전의 통일교육'으로 본 것은 너무 소급해서 본 것으로 보인다. (p.221)

3. 통일교육의 개념과 범주

민병천, “학교 통일교육의 방향”(주제발표), 중앙대학교 민족발전연구원 주최 통일정책대토론회 『민족동질화를 위한 통일교육의 방향』(’97. 1. 28)

○ 통일교육의 정의

-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생활태도를 갖게 하고 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한 가치관과 능력을 갖게 하며, 분단현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갖게하여 장차 통일에 대한 논의와 결정에서 책임있는 민족성원으로 역할할 수 있도록 하는 것”

○ 통일교육의 범주

- 북한에 대한 교육, 자유민주이념에 대한 교육, 민주시민 생활교육, 안보교육, 반공교육, 협회의 통일자체에 대한 교육 등 (p.13)

이서행, “통일교육 내용의 재정립방향”(주제발표), 통일원 주최 세미나 『통일환경 변화와 통일교육 발전방향』(’94. 12. 13)

○ 통일교육의 개념

- 통일은 단순히 분단의 공간적 회복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한 민족의 자유, 평화, 복지증진, 안전보장 등이 확보되는 과정을 함께 의미하며 민족공동체의 회복과 세계 속의 발전이라는 미래 지향적 개념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 통일의 원칙과 주체

- 통일개념의 원칙은 자주, 평화, 민주, 복지이며 통일주체는 해외에 거주하는 교포를 포함하여 남북 전체의 한민족이 된다 (p.35)

김명한, 중앙대학교 민족발전연구원 주최 통일정책대토론회 『민족동질화를 위한 통일교육의 방향』 토론자료 ('97. 1. 28)

- 통일교육의 내용범주 : 『민주시민교육』, 『민족공동체교육』, 『통일국가교육』
 - 『민주시민교육』은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환경 속에서 성장·생활해온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사회를 형성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민주적인 생활규범 등에 관한 교육으로서 통일교육의 바탕을 이루는 교육
 - 『민족공동체교육』은 우리민족의 고유한 역사, 전통, 문화의 재확인을 통하여 남북한 민족의 마음속에 깊이 내재하고 있는 상호간의 불신감과 적대의식을 해소하고 서로가 관용, 화합, 협력할 수 있는 의식과 태도를 함양시켜 함께 살아가는 민족공동체 의식을 기르는 교육
 - 『통일국가교육』은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세계 속의 한민족이 함께 살아가는 하나의 새로운 국가공동체의 형성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인식시키는 교육으로써, 이는 불일간 다가올 통일국가가 동북아 및 세계 속에 차지하게 될 위상을 생각하고 통일된 국가의 국민의 한사람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는 교육 (pp.26-27)

4. 통일교육의 목표와 방향

민주평통, “중·고교생의 통일교육 활성화방안”(주제발표), 민주평통 주최
1/4분기 통일정책포럼('96. 3. 26)

□ 민주시민의식의 함양과 국가안보의식의 고취

○ 통일교육 목표중에서도 변함없이 강조돼야 할 사항은 보편적인 가치를 인식하는 민주시민의식의 함양과 민족의 생존전략에 관련된 국가안보의식의 고취에 있음.

- 그중에서도 통일후계세대들을 위한 학교교육에서는 통일된 세계 중심국가의 주역이 될 민주시민을 육성한다는 인식에 기초를 둔 폭넓은 교육체계가 종합적으로 갖추어져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예: 독일의 정치교육, 일본의 국민형성교육, 이스라엘의 민족종교교육)

※ 민주시민의식의 함양은 남북한이 통일되는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통일이후의 사회에서도 필수적인 요소

- 국가안보문제도 단순히 낭만적 사고와 관념적 수준에서 고려해선 안되며, 북한의 대남전략을 감안해야 한다는 점에서 교육목표상의 중요한 분야로 취급돼야 함. (p.7)

이서행, “통일교육 내용의 재정립방향”(주제발표), 통일원 주최 세미나 『통일환경 변화와 통일교육 발전방향』('94. 12. 13)

□ 통일대비교육으로의 전환

- 앞으로의 통일교육은 통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통일후 예상문제들을 통제가능한 영역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에서 실시되어야 하며 안보위주 및 정부정책 홍보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서 통일대비교육이어야 하는데 그 내용으로는 통일후 유증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분단비용 및 분단으로 인한 사회심리적 고통이 통일비용이나 통일후유증보다 훨씬 엄청나다는 점과 통일을 계기로 세계속에 한민족이 재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p.35)

사기태, 중앙대학교 민족발전연구원 주최 통일정책대토론회 『민족동질화를 위한 통일교육의 방향』 토론자료 ('97. 1. 28)

□ 통일교육 추진의 4가지 방향

- 통일과 안보의 균형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교육
 - 통일과 안보의 두가지 축 가운데 통일에 보다 많은 비중을 두되, 현실적인 안보의 중요성도 고려할 수 있는 균형된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함.
- 민족공동체 의식을 고양하는 교육
 - 이를 위하여 북한의 실상에 대한 정확하고도 객관적인 교육을 통하여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증진시킴과 동시에
 - 우리 민족이 공유해 온 민족전통문화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를 통하여 민족자존과 민족 주체성을 북돋우며 민족통일을 향하여 한민족 공동체를 이룩하겠다는 통일의지를 함양해 주는 교육이어야 함.
- 합리적인 통일대비능력을 배양하는 교육

○ 통일교육과 연계한 민주시민 자질함양 교육

- 서로 다른 사회 구성원들의 의지를 효과적으로 결집시키고, 이해 당사자들의 갈등을 원만히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의 여부는 그 사회 구성원들의 민주시민적 자질에 달려 있음.
- 특히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은 통일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내부적 화합과 단결을 기할 수 있는 통일선결요건일 뿐 아니라, 통일 이후의 삶을 대비하는 데도 매우 바람직한 일임.
- 통일문제에 대한 의사결정 능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민주시민교육이 통일교육의 기반을 이루어야 함 (pp.33-35)

황병덕, 중앙대학교 민족발전연구원 주최 통일정책대토론회 『민족동질화를 위한 통일교육의 방향』 토론자료 ('97. 1. 28)

- 통일교육은 국민들에게 특정 이념체계 및 정책을 주입시키는 방법이 아니라 통일문제 전반에 걸쳐 합리적이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국민들의 능력 배양에 주안점을 두어야 함. (p.43)

이서행, “통일교육 내용의 재정립방향”(주제발표), 통일원 주최 세미나 『통일환경 변화와 통일교육 발전방향』('94. 12. 13)

□ 통일지향적 인간상과 민족동질성의 회복

- 우리 통일교육의 기본목표는 한마디로 통일지향적 인간상과 민족동질성 회복을 길러내는데 있다고 할 수 있거니와

- 통일지향적 인간상이란 근본적으로 의식태도와 생활문화에 의해서 그 실질적인 내용이 규정된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고, 민족동질성 회복은 분단상황속에서 이데올로기적으로 왜곡된 민족현실을 극복하고 분단이전의 통합된 민족사회를 복원하는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 이에 따라 통일교육의 기본방향 또한 양극적 분열상을 노정시킨 이데올로기와 체제비판에서 민족의 평화통일 실현을 위해 남북이 공유될 수 있는 전통문화와 민족동질성 회복의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특히 북한의 대남공세와 관련된 ‘민중적 통일론’과 ‘주체적 통일론’의 대두와 환상적, 감상적, 회의적, 비관적 통일관을 극복하고, 조정 수용할 수 있는 내용과 방법이 개발되어야 한다. (p.34)

민주평통, “중·고교생의 통일교육 활성화방안”(주제발표), 민주평통 주최 1/4분기 통일정책포럼('96. 3. 26)

□ 민족동질성 회복과 민족공동체의식 형성

- 궁극적으로 통일교육이 지향하는 목표는 대립과 적대의식을 해소시켜 가면서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민족성원 모두가 한민족의 구성원임을 자각할 수 있게 하는 민족공동체의식 형성에 두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 남북한의 동질적 측면과 이질적 측면을 상호 비교 분석하는 가운데 이념적·비관적 성격으로 상대방의 부정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교육의 현실을 극복해야 한다는 숙제도 안고 있음. (p.6)

이태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평화통일교육연구위원회 주최 『통일대비교육 지원법 제정을 위한 세미나』 토론자료('97. 7. 3)

- 통일교육의 기본방향은 근본적으로 민족동질성의 회복에 주어져야 한다. 그동안 남과 북은 다른 체제에서 생활하면서 서로간에 체제 경쟁을 벌여왔기 때문에 통일교육도 자칫하면 그 연장선상에서 체제대결 교육으로 오인되기 쉽다. 따라서 우리 헌법의 기본정신에 입각하되 민감한 정치문제 보다는 우리 민족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동일민족으로 통합될 수밖에 없는 필연성을 중심으로 동질성 회복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독일이 청소년들을 교류 하면서 동독 청소년들에게 “독일민족의 마음의 고향”을 찾도록 해주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p.29)

5. 통일교육 강화의 필요성

민병천, “학교 통일교육의 방향”(주제발표), 중앙대학교 민족발전연구원 주최 통일정책대토론회 『민족동질화를 위한 통일교육의 방향』(’97. 1. 28)

○ 통일교육 강화필요성의 근거

- 한반도가 아직도 분단된 상태에서 안정적 평화가 정착되지 않은 가운데 북으로부터의 도발과 위협이 상존하기 때문
- 위장한 민주, 민족세력이 한국의 자유민주체제를 내적으로 손상시키고 있기 때문
- 북한체제의 대변화에 따른 통일가능성의 증대 (pp.14-16)

민주평통, “중·고교생의 통일교육 활성화방안”(주제발표), 민주평통 주최 1/4분기 통일정책포럼(’96. 3. 26)

○ 통일교육이 보다 활성화돼야 할 상황적 개연성

- 구소련 및 동구권의 붕괴, 독일·예멘의 예기치 못한 통일로 한반도 통일환경의 유리한 전개
- 북한 김일성 사후 북 체제의 불투명·불안정성으로 인해 통일이 예상보다 빠르게, 그리고 갑작스럽게 현실화될지도 모를 가능성
-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전술과 관련, 한국내 『민중통일론』의 대두와 친북편향적 세력 존재
- 통일을 위한 실질적·점진적 대비태세의 미확립으로 종합적인 통일교육정책 대안 마련 및 구체적 실천노력 필요성 점증 (pp.6-7)

6. 통일교육의 법제화

김민하, “민족이질감 극복을 위한 학교 통일교육의 확립”(기조연설), 중앙대학교 민족발전연구원 주최 통일정책대토론회 『민족동질화를 위한 통일교육의 방향』(’97. 1. 28)

□ 통일교육 전담기구 신설 필요

-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학계의 노력과 함께 현재 정부에서도 법적, 제도적인 통일교육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학교의 통일교육은 교육부에서 주로 담당해 왔고, 통일원에서는 이를 지원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제 다양한 통일교육을 위한 전담기구가 신설되어야 하고, 교육내용도 전문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p.10)

김갑철, “통일교육을 위한 교수양성 및 교재개발 방안”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평화통일교육연구위원회 주최 『대학에서의 통일교육 개선방안에 관한 세미나』(’95. 9. 1)

□ 가칭 『민족통일교육본부』의 설치 필요

- 독일의 ‘연방정치교육본부’와 같은 기능을 가진 ‘민족통일교육본부’(가칭)를 설치해야 한다. 이 기구는 그 필요성, 목적, 기능, 규모 등에 관한 공청회를 거치고 반드시 국회 입법과정을 통해서 (필히 여야 만장일치로) 설치되어야 한다. 이렇게 설치되어야 국민의 호응을 얻어서 통일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게 된다.

- 이 기구를 국회 안에 둘 수도 있고, 통일원에 둘 수도 있다고 본다. 통일교육본부의 주요기능 가운데에는 통일교육의 목표, 내용, 교수방법의 연구, 통일교육 교과서 MODEL 개발, 통일교육 전담 교수 요원의 양성기금 관리, 교수의 재교육 등의 기능 등이 있음 직 하다. (pp.87-88)

김태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평화통일교육연구위원회 주최 『대학에서의 통일교육 개선방안에 관한 세미나』 토론자료('95. 9. 1)

□ 『민족통일교육본부』 설치 필요

- 독일의 '연방정치교육센터'와 같은 '민족통일교육본부(가칭)'을 설치하자는 주장에 대해 생각을 같이한다. 통일전 독일의 내독성에는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소속하여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였으며, 통일후 내독성은 해체되고 이들은 대부분 동독지역에서 분야별 행정책임자로 일하고 있다. '전독연구소'도 통일후 해체되어 여기서 일하던 전문인력은 통일후 동독지역에서 행정 책임을 맡고 있다.
- 우리나라의 통일원에는 분야별 전문인력이 없기 때문에 정부 각 부처에서 통일관계업무 담당자가 정책자료 제출 등의 일을 자신들의 정규업무 외에 부수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그러므로 막상 통일이 되고 난 후 북한지역에서 분야별로 일할 전문인력이 양성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 그러므로 '민족통일교육본부'(가칭)이 설립되면 국민 대다수를 상대로 하는 통일대비교육은 물론, 통일후 북한지역에서 일할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을 하나의 주요한 업무로 포함하는 문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p.229)

김주성, “민주시민교육의 방향과 개혁과제”(주제발표), 대통령자문 교육개혁위원회 주최 제11차 공청회 ('96. 11. 27)

○ 북한 및 통일교육 정보지원센터 설치

- 통일원, 교육부 공동관리
- 전문사서직, 연구사 배치
- 자료의 복사, PC통신 서비스
- 자료제작, 학교현장에 보급
- 시·도 교육연구원을 지방조직으로 연계 운영
- Edunet를 통한 북한자료의 개방화, 사용상 편의화 도모

○ 북한 및 통일교육연구위원회 상설 운영

- 북한 및 통일교육에 대한 유효도, 공헌도 및 성취도 평가를 주기적으로 시행, 점검함.
- 교육과정 검토 논의
- 교과서 검토 및 보완
- 시의적절한 교수자료를 수시로 작성하여 보급 (p.24)

박용현,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화방안”(주제발표), 통일원 주최 세미나 『통일환경 변화와 통일교육 발전방향』('94. 12. 13)

□ 통일교육의 제도화 필요성

○ 통일교육의 제도화 과정에서 파악해 볼 수 있는 문제점들을 몇항목으로 요약 제시하기로 한다.

- 첫째, 통일교육은 각급 학교교육에서 독립된 교과로 취급한 적이 한 번도 없었으며, 도덕과 국민윤리 교과의 일부로 취급해 오면서 그 교과의 지식체계와 통합체계화된 적이 없이, 극히 적

은 분량의 내용을 단편적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었던 문제점이 있어왔다.

- 둘째, 각급학교의 모든 교과과정은 학문중심으로 편성되어 있어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각 교과내용을 연구하는 전문학계가 형성되어 있으며, 연구와 교육, 그리고 교사양성과정 등이 체계화되어 있다. 이러한 타교과의 교육이 체계적으로 제도화되어 있는 것에 비하면 통일교육의 제도화 수준은 크게 미흡한 상태라고 하겠다.
- 셋째, 정부 주도로 실시해 온 통일교육은 ‘정권안보교육’으로 오인하여 때때로 정치쟁점화하여 논쟁으로까지 비화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정치풍토는 통일교육 제도화의 강화를 가로막는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나아가 통일교육과 관련한 연구와 교육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이 영역의 전문가를 양성·배출하는 학계의 형성을 어렵게 하였다 (pp.11-12)
- 이러한 통일교육의 내재적 특성(사상성, 정치성, 시사성, 종합성 : 정리자 註)을 명시화하기 위하여 이를 ‘정치교육’이라는 명칭으로 체계화하고자 시도한 때도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특유의 정치문화 내지 풍토 때문에 학계의 저항이 있어, 그 같은 시도는 성공하지 못하고 초기부터 시도한 바와 같이 도덕과 윤리 교과에 편승하는 변칙적 조치를 취해 온 것이다. (p.13)

통일교육을 총괄·조정·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필요

- 통일교육의 내재적 성격인 사상성과 정치성 때문에 야기된 바 있었던 정치적 쟁점화를 불식하고 통일교육의 성격 규정과 방향 설정에 여야의 정당은 물론 각계각층의 지도층이 참여하고 합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해진다. (p.14)
- 통일교육은 학교교육은 물론 사회교육을 통해서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그 내용에 관한 연구와 그 체계화를 위해 여러 교육기관과 연구기관을 동원해야 하고 지원해야 한다.

이러한 필요성 때문에 여러 기관을 총괄·조정·지원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고 일관되고 체계적이며 지속적으로 효과있게 실시하기 위해서는, 물론 이와 관련한 연구, 자료 개발 등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앞서 지적인 바와 같은 기관화와 제도의 강화와 그 운영을 위해서도 막대한 예산이 요구된다. 이같이 필요한 예산의 지속적인 확보와 그 효과적인 지출을 위해서 특별한 법적 제도화가 필수적이다(p.15)

□ 전문가로 운영되고, 정당의 감독을 받는 『통일(시민)교육본부』의 설치

- 통일교육을 전담할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고 체계적으로 지속화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연구, 개발, 교육 등에 걸친 업무량은 많고 다양하다.
- 이를 총괄하는 기구는 통일원 산하에 두되 전문가에 의해 운영하도록 하고 의회와 정당대표와 학계대표의 감독에 의해서 운영되도록 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 이같은 기구의 모형은 서독이 오래전부터 설치·운영해온 ‘연방정치교육본부’와 같은 것이다.
- 그 기구의 명칭은 서독과 같이 ‘통일교육본부’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통일교육이 한시적 성격의 것임을 감안하고 또한 새롭게 시도하고 있는 보다 상위의 개념인 ‘민주시민교육’과 통합 체계화해야 하는 요청을 감안한다면 ‘시민교육본부’라는 명칭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pp.16-17)

□ 『통일교육법』·『통일교육정책조정위원회』 설치 필요

- 통일교육을 전담할 별도의 기구를 설치할 경우 법제화는 필수적으로 수반될 것이다. 만일 그 기구 설치가 어려워질 경우에는 『통일교육법』의 제정은 기필코 이루어져야 한다. 그 법의 제정시에도

통일교육의 성격과 목표, 전담기구의 성격과 임무 등을 명시하여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 그리고 통일교육전담기구를 설치하지 못하고 통일원의 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경우에도 『통일교육정책조정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두어 관련부처 국무위원과 의회대표 내지 정당대표가 참여하게 하고 정책입안과 조정기능을 수행함은 물론 통일교육 운영을 감독하는 기능도 담당하게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p.17)

최영표, “중·고교생의 통일교육 활성화방안”(주제발표), 민주평통 주최 1/4분기 통일정책포럼('96. 3. 26)

□ 교육부에 가칭 『통일교실 지원반』 설치·지원

- 학교통일교육 주관기관인 교육부가 학교 통일교육 강화차원에서 가칭 『통일교실 지원반』 설치 운영
 - 학교 통일교육의 일관성 유지 및 학교 통일교육과 조화 가능, 원만한 협조체제 구축, 전문성을 지닌 교육기관이 프로그램 및 자료를 작성, 제공해 볼 수 있게 되어 효과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임.
 - 그러나 이 경우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통일교육 체계간의 연계성과 일관성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 (pp.50-51)

□ 통일원에 가칭 『통일교육본부』를 설치·지원

- 통일사업을 주관하는 통일원이 효율적으로 통일교육을 추진하기 위하여 하부조직 형태의 통일교육본부를 설치하고 지원

- 국가예산을 확보하여 목적사업별로 정부 각 기관 및 유관단체, 지방 자치단체의 통일교육 수행을 협조 지원, 통일교육 지침 및 프로그램 제공 지원, 통일교육 전문가 양성, 사업추진 등을 통해 통일교육의 효율적인 추진 가능
- 설립이 용이하나 관 주도이어서 중립성 유지 의문, 또한 과거 유신시대 편향된 국민정신 교육이 강조된 경험이 있어 부정적 반응 야기가능성이 있음. (p.51)

□ 범국가적 차원의 독립법인체 성격을 지닌 가칭 『통일교육위원회』 설치·지원

- 반관반민의 성격을 지닌 독립법인체로서 통일원과 밀접한 유대관계를 가진 합의제 집행기관인 『통일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하부에 집행기구를 설치·지원하는 방안 검토
 -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관 주도의 정치교육과 시민사회의 자율성 요구 사이에서 오는 갈등을 완화시키면서 폭넓은 국민적 합의기반 조성 가능
 - 통일원 및 평통의 조직을 활용하여 행정력을 통해 통일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능. 단 협조체제가 미흡하여 갈등이 발생하면 효율적인 추진 곤란 (p.51)

최영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평화통일교육연구위원회 주최 『대학에서의 통일교육 개선방안에 관한 세미나』 토론자료('95. 9. 1)

□ 여야합의의 법률에 의해 정부가 주체가 되어 추진

- 결국 정치사회화를 위한 교육은 어떠한 경우일지라도 교육 주체가 국가목표를 실현하려는 정부가 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우리 정치 현실에서는 보다 확고한 제도적 보완장치를 위해 여야가 합의한 입법조치를 통한 교육보장이 필요하다.
- 어떠한 학회성격의 협회가 교육정책을 맡거나 정부의 일방통행적인 기구 창설에 의한 교육은 위험하다. 여야합의에 따라 입법조치된 법률에 따라 정부가 교육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p.30)

장명봉,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입법화의 요청”(주제발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평화통일교육연구위원회 주최 『통일대비교육지원법 제정을 위한 세미나』(97. 7. 3)

□ 통일교육법 제정의 필요성

- 첫째, 통일에 대한 정신적 대비태세를 갖추어야 한다는 점이다. 통일준비는 제도적·정신적·물질적 차원 등 제반의 여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 가운데 정신적 차원의 준비는 실질적인 통일을 위해 중요한 요소이다. 그것은 바로 교육을 통해 통일에 대한 정신적 대비태세를 가다듬는 것이다. 독일과 예멘의 통일과정에서 제도적인 통일 못지 않게 심리적·정신적 갈등의 치유 내지 완화를 통한 내적 통일의 중요성을 우리는 인식할 수 있었다.
- 둘째,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을 제도적으로 강구해야 한다는 점이다. 현실적으로 통일교육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과 경비의 소요가 예상되지만, 이를 해결할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통일교육을 위한 교수요원의 부족 뿐만 아니라 교육내용과 방법에 있어서도 예상되는 통일 내지 제반분야에서의 통합에 대비하는 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제반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 법은 필요하다. 또한 이 법에서 통일교육의 목표와 성

격을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통일교육의 일관성을 기하는 동시에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과정에서의 파행을 방지할 수 있다.

- 셋째, 통일교육의 법적 정당성의 확보라는 점에서 기존의 법적 근거를 보다 강화한다는 점이다. 그 동안의 통일교육의 법적 근거를 찾는다면 「교육법」과 「사회교육법」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통일이란 국가적 및 민족적 과제의 중요성과 방대함에 비추어 기존의 교육법체제로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통일교육을 시행하기에는 미흡하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고 그 법적 정당성을 강화하는 면에서 통일교육법 제정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 넷째, 통일교육의 다양성과 전문성이라는 성격에 비추어 통일교육은 체계적으로 지원·실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 점에서 통일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통일원이 통일교육 분야에서도 종합적으로 지원 및 실시에 관한 기능과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일업무는 단순하게 단일업무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정치·외교·경제·사회·문화·군사 등 모든 분야를 망라하여 연계성을 갖고 추진되어야 하며, 통일교육이 교육만의 기능이 아닌 이러한 제분야에서 종합적인 차원에서 실시되어야 한다는 면에서 통일원에서 주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다섯째, 통일교육은 정부와 함께 민간부문에서의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통일교육은 정부만의 힘으로 제반분야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우며 효율적인 교육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통일교육에 민간의 협력과 지원이 필요한 만큼 민간차원의 통일교육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통일교육에 시민의 자율적 참여를 확대하고 각 분야에서 통일에 대비하는 역량을 배양할 수 있다. 그래서 통일교육은 정부와 민간의 협조체제를 바탕으로 통일에 대비하는 것이다. (pp.13-15)

□ 통일교육법 제정의 의의

- 이 법은 통일이라는 국가적·국민적 과제의 달성을 국민교육 내지 시민교육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근거법인 동시에 '통일교육의 기본법'으로서 통일대비교육체제를 체계화하는 데 중점을 둔 것이다.
- 또한 이 법은 정부의 통일정책추진에 대한 의지를 반영하여 통일 환경의 변화와 신세대의 가치관에 적합한 새로운 통일교육의 개념을 정립하고 그 내용의 질적 향상과 우수한 통일교육요원을 양성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 이로써 통일교육을 위한 교재개발 및 보급,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체제의 강화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확보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이며 현실적합한 통일교육을 위한 토대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통일대비교육지원법(안)」의 제정은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에서 체계화된 통일교육의 기회를 공고히 함으로써 통일의지를 보다 구체화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다.
- 분단극복을 위한 민족적 염원을 전문교육으로 구체화하고 생명력을 부여함으로써 통일을 앞당기고 통일을 마무리하는 민족적 역량이 집결되어야 한다.
- 무릇 분단의 장기화로 인한 남북한 주민간의 사상적·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한민족으로서의 민족적 동질성을 회복하는 방법은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다. 우리의 통일에 있어서 남북한주민 사이 이 사회적·정신적 갈등의 해소는 내적 통일의 최대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은 교육적 차원에서 모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 독일통일이 급격한 상황에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안정기조를 유지한 것은 통일을 대비하여 꾸준하게 실시된 정치교육, 즉 통일교육에 기인한 것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에서 통일후유증으로서 구동서독 주민 사이의 심리적·정신적 갈등은 큰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독일과 달리 통일에 대비한 교육이 일천한 우리의 경우 남북한 주민 사이의 갈등은

통일의 최대 장애요인이 될 것임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도 「통일대비교육지원법(안)」의 기능과 역할이 매우 중요시 된다.

- 「통일대비교육지원법」은 우리 통일방안이 자주적·민주적·평화적인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토대 위에서 과거 환상적이거나 맹목적인 관점에서가 아니라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 제시라는 차원에서 입안된 것이다.
- 또한 통일과정에서 제기될 제반상황과 통일에 대비하는 상황인식과 대응능력을 배양하는 현실론적 대응책의 일환으로 제시된 것이다. 그런 만큼 「통일대비교육지원법」의 목적과 방침에 따라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통일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합리적인 통일관을 형성하는 동시에 통일한국의 미래상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나가야 할 것이다. (pp.22-23)

장명봉, “통일교육법의 제정의 필요성과 내용 검토”, 북한학 연구 및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대학-민족통일연구원간 워크샵 발표논문 (’97. 7. 25)

□ 통일교육법과 교육법·사회교육법

- 통일교육의 법적 근거는 기존의 교육법체제에서 찾을 수 있다. 교육법상 교육방침(제2조)과 교육목적(제3조)을 포괄적으로 해석하면 통일교육도 이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사회교육법 시행령은 ‘국민교육에 필요한 교육내용’에 통일교육을 열거하여(제3조 2항) 규정하고 있어 사회교육법에서 통일교육의 근거를 찾을 수도 있다.
- 그러나 교육법은 교육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학교교육, 평생교육, 학술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규정함으로써 통일교육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사회교육법도 학교교육 이외의 국민의 평생교육의 기회부여라는 목적에 한정함으로써(제1조) 통일교육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하고 있지 않다.

- 이런 면에서 통일의 국가적 및 국민적 과제의 중요성과 방대성에 비추어 기존의 교육법체제로는 통일교육의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 현행 법제하에서 통일교육 관련 규정은 여러 법제에 산재하고 있으며, 그 내용도 불비한 상태에 있다. 그래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통일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통일교육에 관한 단일법을 제정하여 그 구체적인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p.5)

7. 통일교육과 민주시민교육

황병덕, 중앙대학교 민족발전연구원 주최 통일정책대토론회 『민족동질화를 위한 통일교육의 방향』 토론자료 ('97. 1. 28)

□ 체제개혁이 통일교육 실시의 전제조건

- 우리의 통일교육 실시를 위한 전제조건은 우리 체제의 개혁이 선행되거나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권위주의 체제가 유지된 채 통일교육을 실시할 경우 통일교육은 단순히 체제순응 교육으로 전락하기 쉽기 때문이다.
- 이러한 면을 비추어 볼 때 민주적 통일교육은 체제개혁을 촉진시키는 측면이 있지만, 민주적 통일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우선 권위주의체제가 민주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점은 자명한 사실이다. (p.46)

전득주, “대학 통일교육의 현황과 과제”(주제발표), 중앙대학교 민족발전연구원 주최 통일정책대토론회 『통일교육의 현황과 과제』('96. 11. 260)

□ 통일교육은 민주시민교육의 범주내에서 조용히 추진

- 4각의 링으로 비유될 수 있는 남북한 긴장관계하에서 북한의 반응을 고려하지 않고 우리 한국이 통일교육을 대대적으로 외칠 때 북한을 자극하여 군비강화와 군사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사료됨. 그러므로 통일교육을 전면에 내세우기 보다는 민주시민교육이라는 범주내에서 그 교육주체들의 일부로써 “조용히 그리고 은밀히” 통일문제, 남북관계 내지 북한문제들이 “냉철히” 취급되는 것이 우리 국익에 바람직함(pp.8-9)

- 동독문제와 관련하여 독일은 갈등과 대립을 강조하는 통일교육이 아니라 시민교육으로서 교육체제를 유지·발전시켜왔음. 독일의 정치교육은 민주주의에 대한 각종 교육과 연수를 통해 민주적 인격형성과 독재나 공산주의를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데 중점을 두어 왔음(p.10)

□ 초당적 기구로서 『민주시민교육원』 설치

- 민주시민교육의 주체는 민·관·정이며 운영은 민간학자나 전문가가, 재정지원은 정부가, 감독은 여·야 정치인이 담당함
- 본 교육의 기본정책은 여·야 합의에 의해서 수립되어야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민주시민교육원』(가칭)을 초당적 기구로 중앙과 15개 시·도 지부에 설치함.

- 민주시민교육원의 구성원칙

- 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하되 국회동의를 거쳐 임명함.
- 부원장은 국회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야당의 추천과 국회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함.
- 감사는 여·야 정치인으로 구성함.
- 이사회는 주요 사회단체의 대표와 전문가로 구성함.
- 학술자문위원회는 전문학자 및 교수로 구성됨.
- 지원부처는 전국적인 조직을 갖추고 있으며 교육의 효율적 지원이 가능한 내무부로 함 (pp.10-11)

유석렬, 중앙대학교 민족발전연구원 주최 통일정책대토론회 『통일교육의 현황과 과제』 토론자료('96. 11. 26)

□ 민주시민교육 강화방안

○ 전문연구 및 훈련인력 확보

- 각 기과나 및 연구소에 산재해 있는 전문인력 확보
- 전문인력의 해외파견 훈련
- 해외전문가 및 학자 초빙

○ 시민교육센터 창설

- 연구 : 관련 교육자료의 개발, 보급
- 교육훈련 : 교육대상 선정
- 언론매체를 통한 시민교육

○ 『지성인 포럼』 결성 (또는 자문위원회 설치)

- 민주시민교육 전반에 걸친 자문
- 연구용역
- 교육훈련
- 언론매체를 통한 시민교육 또는 홍보
- 사회저명인사 20~30명 추대 (p.19)

민주평통, “중·고교생의 통일교육 활성화방안”(주제발표), 민주평통 주최
1/4분기 통일정책포럼('96. 3. 26)

○ 민주시민교육은 民·官·政을 공동주체로 추진

- 민간학자·전문가가 교육운영을 담당하고, 여·야 정치인 및 주요단체 합의에 의해 대표되는 가칭 『민주시민교육원』을 독립기구로하여 중앙 및 14개 시·도 단위 설치 고려 (p.29)

조영달, “통일시대의 민주시민교육-민주시민교육의 강령과 교육모형 탐색”(민주시민교육 방향정립을 위한 국민대토론회 『민주시민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주제발표문, '94. 10. 8)

□ 통일전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민주시민 7대 행동강령” 제안

1) 강령의 이론적 기초

- 통일 전 한국 사회에서 통일달성을 가속화하고 통일의 정착을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민주시민교육의 내용(목표측면의)은 주로 세 가지였다. 즉 통일의지의 확고화, 통일에 대한 시민적 수용성의 제고, 한반도 정보공동체 구축에의 협력자세 등이 그것이다.
- 통일시대 민주시민의 행동강령은 ...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사람들이 참고할 수 있는 행동준칙을 제시함으로써 우리 사회 내부의 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통일달성의 진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p.71)

2) 강령

- 행동강령의 (1)은 통일에 대한 수호되어야 할 이념과 자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2)는 통일에 대한 인식의 틀을 제안하고 있다. (3)과 (4)는 통일문제의 이해와 통일논의에 대한 강령이다. (5)에서 (7)까지의 행동강령은 북한에 대한 태도와 협력기반 구축에 관련되어 있다.

① 통일의 철학과 방법

한반도의 통일문제는 기본적으로 우리 민족의 문제이지만 이것이 주변국의 이해와 연결되어 있음에 유의해야 하며, 통일은 자유와 복지 및 인간존엄성을 실현-증진케 하는 자유민주주의 철학을 바탕으로 자주적이고 평화적으로 그리고 민주적 통합과정을 거치면서 이루어져야 한다.

② 예측되는 고통의 인내 자세

통일은 장기적으로 한민족의 발전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임을 확신해야 하며, 통일로 인한 단기적인 고통은 우리 모두가 같이 인내해야 함을 인식해야 한다.

③ 문제해결적 사고

역사적 분단에 대한 책임은 7천만 한민족 모두에게 있으며, 지금은 책임소재의 판별이 아닌 통일을 달성하고 정착시켜 나갈 수 있도록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대안을 찾으려 노력해야 한다.

④ 통일논의의 유연성과 합리성

우리의 통일 기조 아래서 이루어지는 통일문제에 대한 논의는, 미래의 선택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유연성을 지녀야 하고, 논의의 과정은 그것이 역사적 문화적 전통이나 학문적 관의 차이에서 출발하는 한 허용되어야 하며, 논의의 결과 선택은 합리적인 것이어야 한다.

⑤ 기본권의 존중과 남북한 비판

인간의 존엄과 자유에서 출발하는 기본권리에 대한 존중은 남북한 어디에서도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역행하는 정책과 제도는 남북한 어디에 속해있든 심각하게 비판되어야 한다.

⑥ 북한사회의 이해와 협력

북한 사회와 북한 주민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협력을 통해 이를 개선하려는 의지를 지녀야 하며, 이러한 과정은 대한민국 국민에 의해 주도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야 한다.

⑦ 한반도 정보공동체의 구축 노력과 민족애 발휘

북한에 대한 정보는 확산-공유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우리의 통일 기조는 지켜야하지만 개인적 접촉 기회에서는 친절한 태도로 대함과 동시에 민족애를 일깨워 주어야 한다. (pp.72-73)

8. 통일교육의 내용

김동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평화통일교육연구위원회 주최 『통일대비교육 지원법 제정을 위한 세미나』 토론자료('97. 7. 3)

□ 통일교육현장의 제정

- 남북한의 통일을 앞둔 대비교육에서나 통일이후의 민족화합을 위한 교육에서 통일현장과 함께 통일교육현장의 제정으로 교육의 지표로 설정함. 서독의 경우도 1978년 통일문화교육성 협의회가 주관하여 통일문제 교육지침을 발표

민병천, “학교 통일교육의 방향”(주제발표), 중앙대학교 민족발전연구원 주최 통일정책대토론회 『민족동질화를 위한 통일교육의 방향』('97. 1. 28)

- 통일당위성 확신과 통일의지 제고
- 자유민주체제에 대한 애착
- 한국 정통성에 대한 확신 부여

* 근거

- 대한제국→대한민국임시정부(상해)→대한민국의 법통을 가진 점
- 정부수립당시 법세계기구인 유엔에서 유일합법정부로 또 다수의 회원국이 승인한 점
- 민족(주민)의 3분의 2를 관할하는 점
- 민족과 국가의 상징인 태극기와 애국가를 계승하고 있는 점
- 통치실적(경제생활정도)에서 월등한 점 등

○ 올바른 북한이해 교육

- 북한의 적화전략, 자유한국 타도, 군사적 위협 등 (pp. 19-21)

민주평통, “중·고교생의 통일교육 활성화방안”(주제발표), 민주평통 주최
1/4분기 통일정책포럼('96. 3. 26)

- 우리의 통일교육 방향이 단순하고 맹목적으로 반공을 강조하거나 북한에 대한 증오·편견을 심는 교육 등 분단체제를 영속화하는 방향에서의 추진을 가급적 지양하고, 예기치 못한 통일에도 준비할 수 있는 포괄적 교육이 되어야 함.

○ 새 교육목표의 내용

- 통일을 예비하고 끌어당기는 교육
- 생명을 살리고 평화통일을 이룰 수 있는 능력에로의 교육
- 엄청난 통일비용의 부담을 참아낼 수 있는 마음에로의 교육
- 북한의 사회와 사람들의 이질성을 인정하고 포용할 수 있는 교육 등

- 정치적 이데올로기 교육에 있어서는 북한에 대해 냉정하고 객관적인 지식을 전달하며, 안보의식을 심어주는 방향에서 추진

※ 평화적 통일교육의 큰 테두리안에서 안보·국민윤리 교육의 병행 모색 (p.10)

- 초·중·고·대학과정에 따른 단계별 교육과 각 단계별로도 구체화·세분화된 내용편성이 요망되며, 대학은 사회교육과 동일한 수준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

- 통일이념이나 지향방향은 일관성이 있고 모든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의지가 결집돼야 하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총괄하는 것이 바람직 (pp.18-19)

최영표, “중·고교생의 통일교육 활성화방안”(주제발표), 민주평통 주최
1/4분기 통일정책포럼('96. 3. 26)

□ 중·고교 대상 통일교육의 내용

- 통일교육은 도덕·윤리과에서 주로 지도하며 사회과, 국어과, 교련과, 특별활동 등에서도 관련 지도하도록 하고 있음. 거시적으로 보면 ① 분단현실의 이해 ② 통일의 준비 ③ 통일이후의 대비 부문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10대 요소로 구성하고 있음 (pp.35-36)

① 분단의 현실

- 분단의 배경과 과정
- 남북한체제의 비교와 현실
- 민족공동체 형성의 기반

② 통일의 준비

- 통일의 당위성(필요성)과 의미
- 통일을 둘러싼 국내외적 상황의 변화(통일여건의 변화)
- 남북한의 통일노력과 문제점
- 통일논의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

③ 통일 이후의 대비

- 통일조국의 미래상과 그 조건
- 통일국가 형성의 과정과 그 과제
- 통일국가에 대한 대비

이영선, “통일교육법 제정에 따른 통일교육체제의 개선방안”(주제발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평화통일교육연구위원회 주최 『통일대비교육지원법 제정을 위한 세미나』(’97. 7. 3)

- 첫째, 교육의 내용을 다양화하여야 한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우수성을 교육함과 아울러 분단민족의 문화와 심리, 사회구조 등 거의 모든 학문 분야에서의 통일과제가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통일문제는 학제적 접근방법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 둘째, 통일교육은 이론과 실천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통일이란 결코 이론에 그칠 수 없는 문제이다. 체험과 감성을 중시하여 통일을 실천하는 데 즉 남과 북의 사람이 만나고 한 공동체를 이루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 셋째, 통일교육을 담는 형식 또한 다양화되어야 한다. 단순한 강의식 교육이 아니라 토론, 시청각, 현지방문, 탈북자와의 대담, 혹은 통일운동 프로그램 작성 등 여러 가지 수단이 동원될 수 있을 것이다.
- 넷째, 통일교육은 다단계로 이루어져야 한다. 북한학과 통일학에 대한 전공학생의 교육도 중요하지만 전체 사회시민의 보편적 교육이 더욱 중요하다. 이를 위해 대학에서 교양과목으로의 통일강좌가 필수적이라 하겠다.
 - 이 교양과목으로의 통일교육에서는 다양성을 위해 여러 분야의 전공교수들의 팀티칭이 불가피할 것이다. 그러나 팀티칭은 아무리 잘 해도 학생들에게 혼란스럽다는 인상을 주기 쉬우며 또 대형강의가 되기 쉬우므로 팀티칭에 의한 교양강좌만으로 통일교육이 완수된다고 생각해서는 안될 것이다.
 - 비록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태이기는 하지만 모든 전공과목에서 전공담당 교수들이 자연스럽게 그 과목과 관련하여 북한의 문제와 통일과제를 다루어 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통일교육이라 하겠다.

- 통일교육법의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분야별로 간단한 교재를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통일교육을 단순히 이데올로기 교육을 위한 일부 학문분야에만 국한하는 일은 속히 지양되어야 한다.
- 다섯째,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북한과 통일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는 일이 중요하다. 특히 북한에서 발간된 자료를 교수와 학생들이 자유로이 접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주의권이 무너지고 북한의 체제가 많은 문제를 지니고 있음이 밝혀진 지금까지 북한의 출판물을 특수자료로 분류하고 이를 많은 비용을 들여서 특별관리할 필요가 있는지를 이제 심각하게 생각해 볼 때가 되었다. 오히려 북한의 발간물을 학생들이 자유롭게 읽게 할 때, 보다 확실한 민주자유체제의 우월성이 인식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pp.49-51)

이경숙,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평화통일교육연구위원회 주최 『통일대비교육 지원법 제정을 위한 세미나』 토론자료('97. 7. 3)

□ 이영선 교수의 발표에 대한 이견

- 통일교육의 일상생활화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치밀한 교육개혁을 수립하고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며, 통일교육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확산시킬 수 있는 통일전문가를 각 영역마다 양성하고 확보한 후에 실시해야 합니다. 통일교육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일관성있는 교육내용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정된 교과가 아니라 학교교육 전 영역으로 통일교육을 확산시킨다는 것은 통일교육이 교과목과 함께 전 체계 자체가 무너질 우려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생활공동체로의 남북한 통일을 위해 문화심리적 통일접근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북한주민들의 의식구조, 정치문화, 사고방식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인식이 바탕이 되어 있는 상

태에서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즉 ‘영도적 수령관’이 요체를 이루고 있는 ‘주체사상’과 지난 50여년간 공고화된 1인 지배체제의 속성을 이해하지 않고는 북한주민들의 의식구조, 정치문화 사고방식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통일교육의 생활화란 일차적으로 북한의 교육이념, 목적, 목표, 교육제도 또는 교육내용의 사실을 검토하고 인식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pp.56-57)

9. 통일교육의 방법

황병덕, 중앙대학교 민족발전연구원 주최 통일정책대토론회 『민족동질화를 위한 통일교육의 방향』 토론자료 ('97. 1. 28)

□ 일방적 강의보다는 토론식 교육이 바람직

- 통일교육은 일방적인 강의식 교육보다는 자신의 생활세계에 입각한 토론 내지 논쟁형식의 교육방식을 적용, 시민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하고 통일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계도하는 데 주력한다. (p.45)

정용석, “통일교육의 효과적 실시방법 모색”(주제발표), 통일원 주최 세미나 『통일환경 변화와 통일교육 발전방향』('94. 12. 13)

□ 통일교육 방법상의 문제점과 대책

1. 기존의 통일교육이 시대적 국민정서를 반영하는데 실패하였다는 점
→우리국민의 시대적 정서를 십분 반영하지 않으면 안된다. 통일과 관련된 오늘의 국민정서는 통일정책의 정권안보 이용 식상, 개인 또는 집단의 정략적 이용 환멸, 성급한 통일접근 반대, 폭력 혁명노선 불안 등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2. 경직된 교육내용 전달방식과 피교육자들의 흥미상실
→경직된 교육내용과 전달방식을 벗어나야 하며, 흥미유발교육으로 승화되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의 값진 가치를 토대로 두 이념, 체제, 현실을 비교 우위론적으로 설명하게 되면 유연성 있는 교육방식이 될 수 있다.

3. 효과적인 내용보다는 형식으로 흐름으로써, 지난날의 통일교육은 양적인 편성과 수량에만 관심

→형식 보다는 내용을 알차게 하는 쪽으로 보완되지 않으면 안된다. 각급 교육기관과 정부·사회단체의 통일관련 교육이 양적으로 얼마나 많이 짜여져 있는가를 기준으로 평가해서는 안되고 그것들이 질적으로 어떤 효과를 거두는가에 관해 초점이 모아져야 한다.

4.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의 주입실패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체제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함양해야 한다. 통일전 서독의 교육에서 실증된 바와 같이 공산 대 민주로 대결된 분단국의 이념과 체제교육은 자유민주주의 우월성에 관한 교육으로 무게가 실렸다. 미국도 소련과 치열한 이데올로기 경쟁을 벌이고 있었을 때, 이데올로기 교육은 공산주의의 소개보다는 자유주의의 역사와 올바른 가치를 이해시키는데 쏟았다.

5. 복합적 민주사회의 다원성에 부응할 수 있는 다양성을 결여함으로써 피교육대상자의 수준에 걸맞는 교육방법, 자료, 기법 등의 효과적 활용이 부족

→다원사회에 걸맞도록 교육방식도 다양화해져야 한다. 피교육대상자의 수준에 맞는 방법, 자료, 기법 등을 적절히 채택해야 한다. 통일교육시간의 일부로서 휴전선 방문을 의무화 또는 권장한다.

6. 북한자료의 폐쇄적 관리로, 북한신문이나 방송 등의 접근이 일반 국민에게 통제됨으로써 북한의 인쇄 및 방송매체 자체가 내포하는 통일교육의 효과적 순기능을 미활용

→북한측 원자료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이를 보다 폭넓게 개방한다면, 북한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촉발하고 북한체제의 모순에 대한 국민적 인식의 폭도 넓혀줄 수 있다.

7. 언론인들에 대한 올바른 통일관련 지식 및 정보전달 미흡

→언론인들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통일문제 지식 및 정보 주입이 시급하다. 국민의 여론방향 설정에 미치는 언론의 역할은 지대하다. 바로 이 언론이 일부의 경우 통일과 북한문제에 관해 아직 정확한 정보와 분석능력을 구비치 못하고 있다.

8. 우리나라 지도자들의 성급한 통일기대감 유포로 빚어지는 혼란.

→노태우 대통령은 금세기내로 통일이 실현된다고 기뻐했을 때마다 확인하곤 하였다. 이어 김영삼 대통령도 20세기 이전의 통일 달성을 강조하곤 하였다. ... 이같은 통일대비태세는 절대 필요하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지도자들의 확신에 찬 금세기내 통일실현 단언은 통일에 대한 성급한 기대감과 체제감 우월감 증폭으로 인한 대북경계심 이완을 몰고 오기 쉽다.

9. 정당·사회단체들간의 통일정책 대결로 인한 혼선

→초당적 범국민적 통일논의 합의가 요청된다. ... 정부로서는 통일 정책에 관한한 국리민복과 평화통일에 역기능하는 반대목소리가 돌출하지 않도록 평상시에 당파와 계보를 초월하여 통일문제와 관련한 정보 공유와 견해 조율에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pp.67-78)

민주평통, “중·고교생의 통일교육 활성화방안”(주제발표), 민주평통 주최
1/4분기 통일정책포럼('96. 3. 26)

- 통일교육 전담교사는 기존의 윤리나 철학, 교육학 정도에서 전공한 수준으로 교육을 담당하는 것은 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한반도의 분단이나 통일문제는 정치적 차원의 문제로서 이에 관련된 학교 전공자가 담당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함.
- 교재는 필요하다면 효율성의 측면에서 만화교재 제작 등도 고려해 봄직함. (p.19)

김명한, 중앙대학교 민족발전연구원 주최 통일정책대토론회 『민족동질화를 위한 통일교육의 방향』 토론자료 ('97. 1. 28)

- 통일교육은 민주주의론, 공산주의론, 현대이데올로기론, 북한학, 안보론, 주변정세, 통일론 등 많은 영역을 포함하는 분야이므로, 교육방법은 『협동교수제(team teaching)』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 사료된다. 통일교과목을 가르칠 때 제분야의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계획하고 실러부스를 짜고 공동으로 교수하고 공동으로 평가하는 방식이라 하겠다. (p.27)

김동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평화통일교육연구위원회 주최 『통일대비교육 지원법 제정을 위한 세미나』 토론자료('97. 7. 3)

- 학습효과의 극대화가 가능한 학교교육에서는 독립교과서에 의한 전담교사가 이상적이며 전담교사의 양성은 전국 각 대학에 북한학과의 설치와 기존의 국민윤리학과 또는 관련 전공학과에 일정량의 북한학을 부과시켜 교사자격증을 부여하도록 함.

- 그리고 현재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통일관련 교육기관(예: 통일교육원)의 강화, 사회교육법 시행령상으로 규정돼있는 10% 이상의 국민정신 교양교육 비율을 30% 정도 상향조정하고 유자격자에 의한 교육지도를 법제화함.
- 시청각교육방법을 중심으로 진행함과 동시에 매스컴의 일정비율을 통일관련 프로그램으로 규정하는 방송법의 개정도 필요함.
- 통일대비교육에 관한 중앙의 기본지침서에 근거하여 각 지방의 자치단체별의 지역적 특성과 실정에 알맞는 통일교육 내용과 방법을 개발하고 교육하는 다양성도 부여함. (pp.32-33)

10. 청소년의 통일문제 인식

최영표, “중·고교생의 통일교육 활성화방안”(주제발표), 민주평통 주최
1/4분기 통일정책포럼('96. 3. 26)

□ '92년 청소년의 통일의식 연구·분석 결과

○ 일반적 경향 분석

- 통일의지가 확고하게 정립되어 있지 못함.
- 민족통일의 필요성을 인식하는데 있어 당위성보다는 현실성에 더 비중을 두고 있음.
- 북한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어 있음.
- 통일의 절실한 필요성을 관념적으로는 인정하면서도 체감하고 있지는 못함.
- 통일문제에 대한 가치관이 확고하게 정립되어 있지 못함.
- 통일문제에 대한 진보적 온건주의 경향을 보임.
- 통일문제에 대한 반외세 민족주의 경향이 농후함.
- 통일 승계세대로서의 청소년의 역할은 인식하고 있음.

○ 배경 변인별 반응 분석

-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임.
- 학교 단계가 높아질수록 통일의지가 강해지고 합리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임.
- 지역별로 볼 때 서울지역이 소극적 현실반응을, 호남·강원지역이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관심을 보임.

- 생활수준별로는 상대적으로 △ 상층계층이 현실지향적이고 보수적인 견해를 △ 중간계층이 진보적 온건주의 경향을 △ 중하층은 진보주의적 경향을 보이는데 비해 △ 하층계층은 무관심하고 방관적인 경향을 보임.
- 가족중에 실향민을 둔 학생이 없는 학생보다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태도를 보임 (p.33)

한만길, “학생의 건전한 통일관 형성을 위한 교육방안”(주제발표), 한국교육개발원 주최 제1회 통일대비교육포럼('96. 10. 30)

서울지역학생의 통일의식 실태분석 결과

○ 표본조사

- 조사대상 : 서울지역중학교 6개교 581명, 고등학교 6개교 545명, 대학교 4개교 294명 총 1,425명
- 조사기간 : '96. 9. 19~10. 2

1) 통일의 당위성

- 학생들은 전체적으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하여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 그래도 대학생들은 통일의 필요성을 가장 절감하고 있다. 중고교생들 중에는 통일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학생들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

구 분		절대필요	현상태를 유지	불필요	상관없음
전 체		49.3	13.3	29.0	8.5
학교 급별	중학생	45.3	16.0	30.7	7.9
	고등학생	40.0	15.4	34.3	10.3
	대학생	75.5	3.2	15.1	6.1

2) 통일후의 국가체제

- 학생들은 통일 후의 국가체제에 대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하는 경향이다. 그러나 대학생들은 중고교생에 비해서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혼합체제를 지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

구 분		자유민주주의	공산주의	혼합체제	모르겠다
전 체		77.8	.1	16.8	5.2
학교 급별	중학생	85.3	.2	8.8	5.7
	고등학생	82.7	.2	12.9	4.2
	대학생	52.7	0	41.5	5.8

3) 통일이후의 사회전망

- 학생들은 통일 이후의 사회에 대하여 낙관적인 전망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비관적인 견해를 갖는 학생들도 거의 반수를 차지하고 있음. 특히 중고교생일수록 통일 이후의 사회에 대하여 비관적인 전망을 갖는 학생들이 많으며, 대학생들이 낙관적인 전망을 갖고 있다.

(%)

구 분		매우 낙관	약간 낙관	변화 없음	약간 비관	매우 비관
전 체		23.8	25.9	6.3	29.8	14.2
학교 급별	중학생	18.1	26.7	7.2	33.6	14.5
	고등학생	22.8	22.3	4.1	33.1	17.7
	대학생	37.4	31.3	9.0	15.5	6.8

4) 학교에서 배우는 통일교육에 관한 견해

- 학생들은 현재 학교에서 다루는 통일교육의 내용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으며,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끌 수 있도록 더 많은 내용을 다루어주기를 바라고 있다.

(%)

구 분		흥미있고 유익하다	더 많이 가르쳐 주면 좋겠다	시험 때문에 공부한다.	관심없고 지루하다
전 체		8.4	48.8	26.4	16.5
학교 급별	중학생	10.7	54.8	19.8	14.7
	고등학생	6.1	38.9	33.2	21.8
	대학생	7.9	55.8	27.0	9.4

5) 통일교육의 효과적인 방법

- 학생들은 통일교육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메스컴을 통한 교육' 학교행사 또는 단체활동을 선호하고 있음. 또한 교과서와 학교수업 그리고 청소년 사회단체를 통한 교육을 선호하는 학생들도 있다.

(%)

구 분		교과서와 수업	학교행사 단체활동	메스컴을 통한교육	사회단체를 통한교육	별로 관심 이 없음	기타
전 체		13.7	25.4	31.2	13.9	12.1	3.8
학교 급별	중학생	19.8	25.0	23.9	14.3	14.6	2.4
	고등학생	8.1	21.3	37.9	15.6	13.8	3.3
	대학생	11.8	34.3	33.2	9.6	3.6	7.5

6) 통일과 북한문제에 대하여 가장 궁금한 사항

- 학생들은 통일문제 중에서 '통일이후의 상황'과 '북한사회의 실상'에 대하여 궁금해 하고 있으며, '남북한의 통일정책', '통일대비자세'에 대하여도 알고자 한다.

(%)

구 분		북한사회 의 실상	남북한의 통일정책	통일이후의 상황	통일에 대비하는 자세	궁금한 것이없음	기타
전 체		27.9	11.1	39.3	10.2	9.7	1.8
학교 급별	중학생	25.3	11.5	39.6	9.6	12.6	1.4
	고등학생	28.9	9.6	41.0	7.2	10.8	2.6
	대학생	31.6	13.1	35.5	17.0	1.4	1.4

7) 북한의 실상에 관한 정보습득 방법

- 학생들은 북한실상에 관한 정보습득 방법으로서는 대부분 텔레비전과 라디오, 신문, 잡지 등 언론매체를 들고 있음.

(%)

구 분		학교 교육	신문, 잡지	텔레비전, 라디오	부모, 형제	친구, 동아리	기타
전 체		7.1	29.7	58.3	.6	1.2	3.1
학교 급별	중학생	7.9	22.1	65.8	1.2	.5	2.4
	고등학생	6.6	27.7	62.9	.2	.2	2.4
	대학생	6.1	49.5	33.7	0	4.7	6.1

11. 학교통일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김민하, “통일을 대비하는 미래지향적 통일교육의 확립”(기조발표), 중앙대학교 민족발전연구원 주최 통일정책대토론회 『통일교육의 현황과 과제』 ('96. 11. 26)

- 서울대 통일교육연구위원회에서 지난 4월 전국 초·중·고 교사와 교육관료 등 8백 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초·중·고교 통일교육 실태조사 결과에서는 64.6%가 현행 학교통일교육이 미흡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담당교과서에 통일교육 관련내용이 아예 없다는 응답도 전체의 56%를 차지했으며, 통일관련 내용이 있더라도 그 분량이 부족하거나 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 이처럼 통일교육이 부진한 원인으로는 입시 위주의 교육풍토로 통일교육이 경시되고 있기 때문(29%)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교육에 이용할 자료가 없거나 부실하며(20%) 교과내용에 통일교육 관련내용이 없기 때문(16%)이라는 견해도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통일교육을 하는 데 필요한 내용으로는 민족동질성 회복(31%), 북한실상알기(22%), 통일의식 고취(18%), 통일이후 삶에 대한 적응(13%) 등이 거론되었습니다. (pp.1-2)

김희대, 중앙대학교 민족발전연구원 주최 통일정책대토론회 『민족동질화를 위한 통일교육의 방향』 토론자료 ('97. 1. 28)

○ 교육제도 측면

- 현행 입시위주의 교육이 주는 폐단이 통일교육을 소홀히 하게 한다. 대학수능시험 400점 만점에 통일관련교과인 윤리의 출제 문항수가 10문항 안팎이다. 과거 학력고사에서는 윤리교과가

340점 만점에 25문항을 차지하였고 통일과 관련된 문항이 빈번히 출제되었으므로 학습에서 의도적으로 강조되어 왔으나, 수능 시험 도입이래 특히 통일과 관련된 문제가 입시문제에서 배제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동기를 크게 약화시키고 있다.

○ 교육내용 측면

- 통일교육과 관련된 윤리교과 내용이 교과단원 상호간 일관성이 결여되어 혼돈을 초래하고 있다. (구교과서) 교과서와 교육과정에서 제시되고 있는 안보적 대북관은 민족과 남북의 상호공존을 말하고 있는 교과서의 또다른 통일교육내용과 갈등을 일으키면서 교사와 학생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 교육방법 측면

- 통일교육의 수업방식이 여러 가지 연유(수업시수의 부족, 교사의 전문성 부족과 자신감 결여, 관련 교재·교구의 부족 등)로 암기 주입식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고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대학에서 고교 교육과정에서 접해보지 못했던 기존의 통일과 체제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 솔깃해지고 이에 심취하게 된다.

○ 교사 측면

- 통일교육 전담교사들의 전문적인 지식과 가치관 결여이다. 학생들의 질문에 명쾌하게 답변할만한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가 부족하고, 북한에 대한 갈등적 인식구조의 상존으로 말미암은 정치논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통일교육을 어떻게, 어떤 내용과 형태로 지도해야 바람직한지에 대한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pp. 28-29)

한만길, “학생의 건전한 통일관 형성을 위한 교육방안”(주제발표), 한국교육개발원 주최 제1회 통일대비교육포럼('96. 10. 30)

- 통일교육이 주요 관심대상에서 제외되고 등한시되는 원인은 입시 위주의 학교교육 풍토에서 찾을 수 있다. 현재의 학교교육은 입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과목은 그 만큼 중시되고 있는데 반해서, 입시에 반영되지 않는 과목은 그만큼 등한시되거나 무시되고 있다. 특히 고등학교 단계에서 통일교육 내용은 주로 윤리과 교과서에 반영되고 있는데 시험에 거의 출제되지 않기 때문에 소홀히 다루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 교사들은 통일교육의 문제로서 ‘개념의 불분명’ ‘방향설정의 미흡’ ‘자료부족’ ‘교원에 대한 연수기회 부족’ 등을 지적하는데, 이러한 문제는 통일교육 자체의 문제이면서 오히려 부수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보다 중요한 문제는 통일교육 내용이 대학입학 시험 문제로서 출제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pp.28-29)
- 교육내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교육외적인 풍토 가운데에도 통일교육의 효과를 제한하는 요인이 있다. 즉 국민들의 통일관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통일에 대한 사회적인 여론을 일관성있게 형성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정부의 통일정책에 일관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교사들이 통일문제를 가르치는 데 애로를 겪고 있다. 예를 들면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는 것이 옳다고 설명하다가 반대로 식량지원이 옳지 않다고 말하기가 곤란하다는 것이다.
- 학교현장에서 통일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은 교육외적인 요인을 중요한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현장교사들은 정치사회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통일교육을 소신있게 실천하는 데 제약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통일문제와 북한의 현실에 관하여 가르치는 내용이 때로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조심스러워진다는 것이다. 최근에 통일문제에 관한 논의가 이전보다 개방되어 있다 그러나 국민들 사이의 통일관이 워낙 차이가 클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여론도 다양하기

때문에 통일문제를 다루는 것이 교사들에게 여전히 부담이 되고 있다. (p.30)

- 앞으로 개편할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각 교과와 특성에 부합할 수 있도록 통일교육의 내용을 개발하고, 이를 교과서 개편과정에 반영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북한 및 통일문제에 관한 내용을 각 교과와 특성에 적합하게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다.
- 예컨대 국어과는 북한 언어의 특성과 우리와의 차이점, 그리고 남북한 문학의 차이점이나 유사점, 남북한 학생이 공통적으로 즐겨 읽고 있는 문학작품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 예체능 교과에서도 북한의 예술, 체육, 민속, 오락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룰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교육현장에서 통일교육을 실질적으로 실천할 수 있으려면 교과서 개편 작업을 통하여 각 교과에서 통일교육 관련내용을 다루도록 해야 한다.(p.34)
- 종래에는 통일교육에서 이념과 체제, 또는 사상과 제도와 같은 추상적이거나 포괄적인 내용을 많이 다루어왔다. 학생들에게 이러한 내용을 단순히 암기하도록 하거나 그것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도록 하였다. ... 이제 통일교육은 학생들의 일상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면서 쉽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소재로 내용을 구성해야 한다. 통일교육과 관련하여 학생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들은 대단히 많다. 학생들은 가정생활, 의식주생활, 가족관계, 생활관습 등 북한학생들의 생활에 관한 많은 사항들에 대하여 호기심을 갖고 있다. (p.35)
- 통일교육의 내용은 교과서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되, 그것에 고정시킬 필요는 없다. 교과서의 내용은 통일교육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과 기본적인 시각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통일교육은 북한의 현실에 관한 사실적인 정보, 통일문제와 관련되는 시사정보 등을 다양하게 다루어야 하므로 교과서의 고정된 정보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교과서 내용에 기초하여 변화하는 현실에 관한 다양하고 풍부한 지식과 정보를 융통성있게 다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p.36)

민주평통, “중·고교생의 통일교육 활성화방안”(주제발표), 민주평통 주최
1/4분기 통일정책포럼('96. 3. 26)

- 차별화된 교육목표의 체계화 미흡 : 교육목표가 단순화·포괄적으로 제시됨에 따라 분명한 방향성과 지침을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음.
- 통일관련교육 명칭문제 논의 부족 : 『통일교육』이란 명칭의 타당성이나 교육개념 및 정체성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통일문제에 대한 교육적 패러다임 정립 미흡 : 통일문제에 대한 규범론적 차원과 경험론적 차원을 통합할 수 있는 틀 제시 미흡 (예: 통일과 안보개념의 부조화)
- 소극적·방어적 통일교육 치중: 장기적 시각에서의 접근보다는 단기적이고 즉각적인 효과성의 강조로 인한 조급성이 일부 반영
 - 6·25 체험세대의 편향적 사고가 교육내용에 반영됨으로 인해 전후세대들과의 일체감형성 미흡
 - 통일지향적 민주시민상 제시 미흡
- 통일교육교재의 비적절성 : 통일교육 내용이 5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개편되는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개편됨으로써 시의성이나 적절성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요소가 없지 않아 있음.
 - 내용 자체도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이론적이어서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학습하기에 부적절하게 구성
 - 또한 통일교육기로 설정된 제6차 교육과정의 의도와 맞지않게 중학교 도덕교과서에는 전학년과정중 중2과정에서 1단원 70p 정도로 축소되었으며, 고등학교 윤리교과서에는 마지막 단원에서 3학년말에만 다룸으로써 3년중 일부기간에만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

- 교사중심의 암기식·주입식 교육방법 : 통일된 세계중심국가 건설이라는 목표에 매진할 것인가하는 실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일과정을 직접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형태로 진행되어야 함에도 단순한 통일안보문제에 대한 지식전달의 차원에 국한된 교육방법상의 한계 내재
- 학교통일교육 관련 당사자들의 관심 부족 : 학교당국, 교사, 학생, 학부모의 대부분이 통일교육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바, 이는 근본적으로 입시위주의 교육제도하에서 통일교육과정이 입시에 비중있게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됨.(예: 대입 수험능력시험에서 통일단원이 2년동안 계속 출제되지 않음으로써 그 중요성이 매우 평가절하된 상태) (pp.13-16)

최영표, “중·고교생의 통일교육 활성화방안”(주제발표), 민주평통 주최 1/4분기 통일정책포럼('96. 3. 26)

□ 학교주관 통일교육의 문제점

- 통일교육 지도자료도 구체성이 미흡하고, 일선교사들도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지 못한 실정임.
- 관련된 교과지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원론적 차원에서 수업모형을 제시하고 있을뿐 수업내용의 과중, 자료의 부족 등 제반여건의 미흡으로 인해 학습현장에 충실히 적용되고 있지 못함.
- 통일교육이 도덕성을 배양하는 도덕·윤리과에 병합되어 있어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음. (p.37)

김희대, 중앙대학교 민족발전연구원 주최 통일정책대토론회 『민족동질화를 위한 통일교육의 방향』 토론자료 (97. 1. 28)

- 교육제도 측면 : 통일교육 관련교과에 대한 내용의 개선과 확충 그리고 평가방법의 쇄신 등이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 즉 통일교육관련 교과인 고교 윤리교과의 수업시수를 주당 1시간에서 2시간으로 확충하여, 단기적으로는 수능평가, 논술시험 등 각종 평가에도 반영하여야 학생들에게 통일교육의 중요성을 인식케 한다. (p.29)
- 교육내용 측면 : 통일교육의 체계가 일관성있게, 통일교육의 내용이 현실성과 타당성있게 제시되어야 한다.
 - 현행 통일관련 개정교과서(6차교육과정)에서는 구교과서(5차교육과정)의 중요단원이었던 현대이데올로기, 국토분단의 과정, 북한의 현실을 삭제하고, 통일환경의 변화에 따른 민족통일의 조건과 통일이후의 전망이 신설하였다.
- 통일관련 내용을 통일 이후의 교육까지 확대하는 진일보한 면을 가지고 있으나, ... 통일교육의 한부분인 북한이해교육이 배제됨으로써, 북한에 대한 객관적 인식이 소홀해질 수 있어 학생들은 한층런 사태에서 보는 것처럼 북한과 이데올로기에 대한 편향된 시각을 가질 수 있다.
- 또한 개정교과서는 통일이후의 전망을 신설하고 있으나 통일국가의 미래상과 관련된 추상적 내용일뿐 통일이후의 교육에 대비하는 내용이 부족하다. (p.30)

12. 학교통일교육 개선방향

민주평통, “중·고교생의 통일교육 활성화방안”(주제발표), 민주평통 주최 1/4분기 통일정책포럼('96. 3. 26)

□ 학교통일교육에서의 정책 검토사항

○ 통일교육시간의 제도적 확보

- 현재 중학교 과정에서는 도덕이 매학기당 평균 2시간씩 배정되고 있으며,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윤리과목의 총이수단위가 6단위 등 매학기 학급별 주당 1시간 수업을 6학기 동안 실시하도록 되어 있음. 이중 통일관련 단원을 학습하는 시간은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중학교의 경우 총 16시간 내외, 고등학교의 경우 8~10시간 정도를 할애하고 있는 실정으로 통일교육에의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태임.
- 이에 따라 통일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중학교의 경우 2~3학년중 어느 1개 학년의 수업중 1시간을 통일교육에 할애하도록 하고 △고등학교의 경우 이수단위를 8시간으로 늘림으로써 역시 2~3학년중 어느 1개 학년 윤리과목의 주당 수업시간을 2시간으로 하며, 그중 1시간을 통일과목에 편성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p.21)

○ 통일교과서의 분철 및 내용개편

- 현재 통일단원은 도덕 및 윤리과목에 통합되어 취급됨으로써 시의적절한 내용이 다루어지지 못해 급변하는 통일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냄

- 또한 통일단원의 내용도 지나치게 이론적이며 설명 위주로 되어 있어 탐구수업모형이나 협동학습모형 등 학습자 중심의 체험적 수업이 불가능
- 이에 따라 현재 학교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통일교육이 정상화 되기 위해서는 통일교과서가 도덕 및 윤리교과서에서 분철되고, 내용역시 적절하게 개편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됨.
- 이를 위해 통일교육과 관련있는 시사성있는 자료를 교육행정 전 산망을 통해 공급하고, 교육부에 교육계, 학계, 행정계의 전문가 로 구성된 '통일교육자료 개발팀'을 상설 운영함으로써 시사성있 는 자료를 학습자중심 수업모형에 적합하게 개발하려는 노력이 고려되어야 할 것임.
- 각급 학교 단위의 통일교육 정보자료실의 의무적 설치방안 검토 (pp.21-22)

○ 학습자 중심의 체험적 수업모형의 개발

- 각 시·도 교육청별로 구성되는 교과연구회에 해당지역의 도덕 및 윤리교사가 참여하는 『통일교육연구회』를 설치하고 시·도 교육청이 이들을 지원함으로써 지역특성 및 학생수준에 맞는 학습자 중심의 체험적 수업모형을 개발하게 하고, 이를 학교현장에 실제로 적용
- 또한 대학의 윤리 및 도덕교사 양성과정에서 통일교과를 전공필 수과목으로 지정하여 목표 및 내용, 체험적 교수방법을 체계적으로 습득케 함.

○ 종합생활기록부 및 대입수능시험에 반영

- 입시위주의 교육에 따르는 국·영·수 우선의 교과과정 및 입시 배점의 비중문제 조정

- 따라서 고입 연합고사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그리고 대학별 논술시험에 통일교육과정이 반영되는 것은 교육효과면에서 다른 어떠한 동기부여보다도 학교, 학생, 교사, 학부모에 대한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것임. (pp.21-22)

최영표, “중·고교생의 통일교육 활성화방안”(주제발표), 민주평통 주최 1/4분기 통일정책포럼('96. 3. 26)

□ 통일교육 교재·자료의 적시공급 및 그 체계 구축

○ 통일환경의 급변에 따라 적시에 교과서 공급·제공

- 통일관련 교과서를 교육과정 개편후 1년 내에 곧바로 수정, 공급
- 도덕·윤리 교과서중 통일관련 부분은 분철 검토
- 통일교육 실험학교를 상시 운영하여 교과서 개편, 실험 요구에 부응

○ 통일교육 관련 시사성 있는 자료를 교육행정 전산망을 통해 공급

- 통일교육담당 교사들이 급변하는 정세에 따라 시사성있는 자료를 주기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전산망 활용

○ 가칭 『통일교육자료 개발팀』 상설 운영

- 시사성 있는 통일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계, 교육계, 연구계, 행정계 인사들로 구성된 가칭 『통일교육자료 개발팀』 상설 운영
- 시사성 있는 통일교육자료를 제작하여 일선 현장에 공급 (p.41)

□ 통일교육의 사회과학적 접근

- 통일교육이 1970년대까지는 이데올로기 교육, 1980년대 이후는 도덕교육의 접근방법에 의존하고 있어 한계가 있으므로 사회과학적 접근으로 전환하는 문제 검토
- 이는 학생들이 현실성을 중시하는 점을 감안하여 통일교육이 정의적 접근보다는 지식, 이해와 같은 인지적 특성과 가치관, 태도까지 포괄하는 사회과학적 접근이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임 (p.42)

민병천, “학교 통일교육의 방향”(주제발표), 중앙대학교 민족발전연구원 주최 통일정책대토론회 『민족동질화를 위한 통일교육의 방향』(’97. 1. 28)

○ 새 통일교육 여건의 조성

- 진학과 공직시험 등에 반영함으로써 유인요인 부여
- 통일교과목의 필수화(대학) 또는 이수단위 확대(중등교육기관)
- 담당자에 대한 조직적 관리와 수련지원
- 이론과 합리성을 갖춘 지침서 또는 교재의 개발
 - 민주주의론, 공산주의론, 현대이데올로기론, 북한학, 한국안보론, 주변정세, 통일론 등을 모두 포괄하는 종합적 교재개발 (pp.17-18)

박용헌,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화방안”(주제발표), 통일원 주최 세미나 『통일환경 변화와 통일교육 발전방향』(’94. 12. 13)

□ 통일교육을 독립교과로 취급

- 학교교육의 경우 통일교육은 현행의 것보다 그 내용의 양과 시간에 있어서 대폭 확대되어야 하며 최소한 한동안 실시되었던 바와 같이 주 2단위 수준은 확보되어야 한다. 통일교육을 독립교과로 취급함이 기대하는 바일 것이다
- 그렇지 못할 경우 현행과 같이 中의 『도덕』과 高의 『윤리』교과에 편입해서 취급하되 통일교육의 비중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통일교육의 성격상 도덕 내지 윤리 교과에 편입해서 취급하기 보다 앞으로 강화하려는 『시민교육』에 편입시켜 그 내용을 체계화하는 연구와 아울러 교과명칭의 개칭 가능성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pp.17-18)

13. 대학통일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이우영, “대학통일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주제발표), 연대 통일연구원 주최 『통일교육에 관한 심포지움』(’97. 5. 2)

- 통일원은 대학 통일교육에서 강조되어야 할 목표 또는 내용으로 ①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확신(공산주의 체제와의 비교, 남북한사회 비교), ② 통일의 조건과 장애요소, ③ 통일의 절차와 방안에 대한 이해, ④ 통일 후의 국가건설 과정에서 제기될 문제, ⑤ 통일 후 국가양태에 대한 신념 등을 지적하고 있다. (통일원, 『’95 통일교육기본방향』) 이와 같은 통일교육이나 이의 일부분인 대학 통일교육에 대한 개념 정의는 미래지향적이고 통일을 실질적으로 준비하는데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의 반공주의적인 통일교육관보다는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한다든지 체제역량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대결주의적이고 냉전적인 사고구조로부터 자유롭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여전히 통일교육을 윤리나 도덕과목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것이며, 통일교육을 정치교육의 일환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통일문제의 상대방인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다.

- 통일교육의 목표는 기본적으로 통일을 지향하는 의식을 개개인이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서 필요한 북한 및 통일문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통일과정에서 사회전체와 개개인이 경험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는데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이에 덧붙여 대학이 보다 전문적인 지식인을 배양한다는 점에서 북한 및 통일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가 가능할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하는데 대학통일교육의 부차적인 목표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p.16)

김갑철, “통일교육을 위한 교수양성 및 교재개발 방안”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평화통일교육연구위원회 주최 『대학에서의 통일교육 개선방안에 관한 세미나』('95. 9. 1)

- 1970년대 중반 이후 학교교육에서 도덕교육, 가치교육이 학생의 행위 준거틀이 되지 못하고 한낱 암기과목으로 되고 만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그 중에서도 교육내용과 교육환경 사이의 상충성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 다음으로 대학에서 가치관 교육, 통일교육 등 정치교육이 대학생의 민주시민문화 형성에 큰 기능을 하지 못한 이유 가운데에는 교육환경 외에도 담당교수의 양적 부족 뿐만 아니라 질적문제, 즉 얼마나 잘 가르치느냐의 문제가 있다.
- 대학졸업 최저 이수학점(140점)의 30%(42학점)를 점하는 교양과정은 필수교양(12학점), 선택교양(8-22학점), 지정교양(9-30학점)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양과목은 시간강사 몫이 된다. 특히 그 가운데서도 선택교양의 경우 시간강사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통일교육 관련 과목이 선택교양에 속해 있다는 점이다.
- 통일교육 관련 과목을 시간강사가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는 문제가 될 수 없다. 그 시간강사가 자기의 전공과 꼭맞는 강의를 맡을 수 있느냐 하는데 문제가 있다. ... 전문성과 부합하여 신념과 자신감으로 교수해야 권위있는 강의가 되어 가치교육의 내면화가 이루어지는 법인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니 교수목표에 미달하는 학습과정이 되고 만다. (pp.88-90)

< 대학에서 국민윤리과목의 채택/개편 과정 >

- 1968 : 국민윤리를 대학 교양과목으로 채택 권장
- 1970 : 교양 필수과목(2학점)으로 지정
- 1989 : 대학 국민윤리과목의 필수·선택 여부 대학자율에 일임
 - * 대부분의 대학에서 국민윤리는 교양선택과목으로 개편
- 1990 : 대학 국민윤리과목의 존폐여부 대학자율에 일임
 - * 이 결과 대학에서 국민윤리라는 과목명이 사라지고, 대체과목 등장

< 국민윤리1> 의 대체과목

- 한국윤리, 동양윤리, 한국전통사상, 민주시민윤리, 직업윤리, 동양사상, 여성학 등

< 국민윤리2>의 대체과목

- 현대 민주주의, 현대사상과 이데올로기, 북한학, 북한의 사회와 정치, 한국정치의 이해, 민족통일론, 현대 사회사상 등

이우영, “대학통일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주제발표), 연대 통일연구원 주최 『통일교육에 관한 심포지움』(97. 5. 2)

○ 북한학과 설치현황

- 1994년 동국대학교(야간·40명)를 시작으로 명지대학교(야간·40명, 1995년), 관동대학교(주간·40명, 1996년), 고려대학교(주간·40명, 1997년)에 『북한학과』가 설립되어 현재 학생들이 수학하고 있다. 학부의 북한학과는 아직 초보단계이지만 특수대학원의 북한학 혹은 통일정책 관련 교육은 상대적으로 활발하다. 1996년 현재

서강대학교의 공공정책대학원을 비롯하여 총 13개 대학에서 통일 관련 특수 대학원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 * 경기대학교 통일안보대학원(북한정치경제 전공), 경희대학교 평화복지대학원(평화안보학과, 동북아학과), 고려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북한 및 지역연구학과),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외교안보학과),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안보행정학과, 북한학과 1·2군), 숭실대학교 통일정책대학원(통일정책학과),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북한학과),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정책학과),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북한학과), 외국어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외교안보학과 북한전공), 인천대학교 행정대학원(안보통일정책 전공),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안보정책전공) (pp.7-8)

○ 운영상의 문제점

- 현재 북한학과가 북한정치나 체제문제 등에 치중된 교과과정을 갖고 있는 것은 일차적으로 북한학과가 정치학을 전공한 학자들의 주도로 개설되었고 인원구성도 정치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 올해 개설된 고려대학교 북한학과의 경우 교육학자 1인이 현재 전임으로 재직하고 있으나 그밖에 동국대는 정치학자가 3인, 명지대는 정치학자가 4인, 관동대는 정치학자 1인이 전임교수진을 구성하고 있다. 특수대학원의 북한학과의 경우 별도의 전임교수진은 없으나 대부분 정치학을 전공한 학자가 책임을 맡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p.8)

○ 통일관련 교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

- 통일관련 교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은 학교와 담당교수에 다소간 차이가 있으나 과목 자체에 대해서는 흥미를 갖고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수강신청 인원도 적지 않다.

- 한 학교에서 실시한 북한의 이해 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에 따르면 가장 인상깊었던 주제로 꼽은 것으로 '북한영화 감상'이 39.0%로 제일 높았고, 다음으로 '북한의 문학' 12.4%, '탈북학생과의 대담' 11.8%, '북한경제' 10.9%, '김일성·김정일 연구' 7.6%, '북한의 문화' 2.4%, '항일무장투쟁사' 2.4%의 순이었다. 또한 추가했으면 하는 주제로 '북한의 실상'(29.9%), 북한교육(11.7%), 북한언어와 남북한 언어차이(10.4%), 탈북학생과의 대화 확대(10.4%), 통일방안 및 통일후 남북한의 변화(9%) 등을 꼽고 있다.(상명대학교 「북한의 이해」 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
- 북한 분야에서는 북한사회의 실상을 가장 궁금하게 여기고 있으며, 통일문제에 대해서는 통일 이후 예상되는 상황과 같은 실질적인 차원의 문제에 관심이 많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pp.10-12)

o 자료의 부족문제

- 구체적인 수업진행과정에서 학생들은 자료의 부족을 첫 번째 문제로 꼽고 있다. 의욕적으로 공부를 해보고 싶어도 다양한 자료가 부족하고, 있는 자료에 대한 접근도 여의치가 않다는 것이다.
- 자료에 대해서는 강의를 진행하는 교수들도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특히 북한 원전에 대한 활용이 법적이고 제도적인 문제로 자유롭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는 경우가 많았다.
- 예를 들어 학생들이 가장 인상깊게 받아들이는 북한영화 감상도 학교에서 실시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통일원의 특수자료실에 반드시 가야하는데 일차적으로 수업이 잇달아 있는 학생들을 인솔하고 학교 밖으로 가는 것이 용이한 일이 아니다.
- 현재의 원칙에 따르면 지방에서 강의를 하는 교수나 학생들은 수업시간내에 북한영화 관람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현재 통일원 특수자료실의 수용능력은 최대 70명에 불과하

며 대형 강의를 듣는 학생들의 시청각교육도 근본적으로 어렵다 (pp.12-13)

o 강의 내용의 피상성

- 다음으로 학생들이 갖고 있는 수업진행의 불만은 강의내용이 피상적이라는 점이다. 강의내용이 피상적인 것은 일차적으로 시간의 부족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한 학기안에 북한 사회의 기본적인 특성을 알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며, 더욱이 중등교육과정에서 기초적인 북한관련 상식도 없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북한에 대한 심층적인 강의를 진행하기는 더욱 어렵다.
- 이에 못지않게 강의를 담당한 교수의 능력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북한을 전공하는 학자라고 하더라도 각각의 고유 전공이 있기 마련이고 자신의 전공과 동떨어진 내용을 강의하는 것은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초빙강의나 팀티칭 형식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으나 이 경우 수업체제의 일관성이 유지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실제로 이와 같은 형식의 강의를 듣는 학생들은 수업내용이 중복되는 문제가 있고, 전반적으로 혼란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p.13)

o 구조나 체제 중심

- 북한이나 통일문제에서 구조나 체제의 차원이 상대적으로 강조되는 반면, 일상생활 차원은 경시되는 경향이 있다. 학생들은 북한사회의 현실이나 북한사람들의 일상생활에 관심이 높다. 그리고 통일문제에서는 통일이후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것인가 그리고 통일dmf 위해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어떤 준비를 할 것인가 하는 등의 보다 실질적인 차원에 관심이 높다. 그러나 대부분의 통일관련 강의는 북한의 이념체제나 권력구조, 그리고 남북한 체제비교를 상대적으로 중시하고 있으며, 통일문제에서는 통일정책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 북한학과의 문제

- 북한학과의 경우도 학과가 개설된지 얼마되지 않아서 졸업생을 배출하지는 않았으나, 현재 재학중인 학생의 대부분이 진로문제를 걱정하고 있으며, 학문적 정체성에 대해서도 회의가 많다. 또한 학과의 전임교수진이 정치학 전공자 일변도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도 균형잡힌 북한연구를 어렵게 할 뿐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통일문제 전문가를 양성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p.15)

14. 대학통일교육 개선방향

문용린, “통일교육의 방향과 주요내용”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평화통일교육연구위원회 주최 『대학에서의 통일교육 개선방안에 관한 세미나』(’95. 9. 1)

- 대학에서의 통일교육은 초·중·고에서의 통일교육과 어떤 점에서 다른가? 초·중·고에서는 통일과 관련해서 초·중·고 수준 또는 일반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태도, 지식, 신념, 행위규칙이 있다는 전제하에 그런 메시지를 하나의 교재로 묶어서 내면화시키고, 이해시키고, 습관화시키려는 데 주된 목적이 있었다.
- 그러나 대학에서는 이와 아주 다르다. 대학에서는 통일과 관련된 이론과 사실, 가설과 호기심, 정책의 수립과 평가, 비판 등을 주된 주제로 사고하고, 논의, 토론하는 기술을 가르친다. 즉 통일에 대한 논의의 결과를 주입하는게 아니라, 통일에 대한 지식을 생산케 하고자 한다.

1) 교수활동의 활성화

- 모든 교수들이 전공하고 있는 영역에서 통일문제가 각자의 독특한 관심에 따라 학문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구비의 제공이 요구되고, 북한 관련 자료 및 통일과 관련해서 연구테마가 보다 쉽게 찾아지도록 많은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통일원과 안기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모든 학문분야가 통일에 관심을 가지도록 자료제공과 연구비 제공에 힘쓸 필요가 있다.

2) 학생활동의 활성화

- 연구비와 자료의 제공이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하다. 대학생들에게 체험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북한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중국의 만주나 연변지역에의 개인여행, 탐사여행, 파견연구 등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현상논문 공모 등의 활동도 필요하며, 이들을 활용하여 통일에 관한 문학, 예술활동을 전개시킬 수도 있다.

3) 교수-학생의 공동활동 활성화

- 신세대와 기성세대의 단절과 갭은 사회 모든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특히 통일문제와 관련해서는 그 견해 차가 너무 크다. 따라서 교수-학생의 공동활동은 통일논의와 관련해서 매우 중대한 의미가 있다.
- 강의시간에 각 전공강의 특색에 맞는 적절한 통일의 테마가 삽입되도록 강의요목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 강의요목 개발비는 지원해 줄 수도 있고, 통일·북한 관련 테마를 짧게, 요령껏 정리해서 강의시간에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수업모듈을 개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아울러 교수-학생이 함께 추진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공동프로젝트를 통일과 관련해서 제공할 수도 있다.

4) 학내 지원의 활성화

- 대학은 각자 확보한 기금으로 통일문제 연구에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국내외의 저명한 통일·북한 관련 학자를 초빙해서 강의·연구에 참여케 할 수도 있다. 그밖에 자매결연 사업 등을 통해서 통일관련 연구를 활성화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5) 학외 지원의 활성화

- 교육부, 통일원, 안기부, 국방부, 재정원 등은 모두 통일과 북한에 관련된 연구를 활성화시킬 책임을 지고 있다. 정부 자체의 지원금액을 증가시키고, 정부가 주선해서 산학협동의 방법을 모색해 주어야 한다. (pp.44-46)

민주평통, “중·고교생의 통일교육 활성화방안”(주제발표), 민주평통 주최 1/4분기 통일정책포럼('96. 3. 26)

- 현행 국민윤리학과에서 교육내용을 더욱 보강, 모든 학생들이 교양과목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조치

※ 재원 및 교수 확보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통일·북한관련학과의 각 대학으로의 확대 신설 검토

- 대학은 통일교육교사 양성에 중점을 두며 대학에서 교직을 이수하였다 해도 일선교사로 임용전 중앙의 통일교육지도자 양성소에서 연수교육을 필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일관성을 유지 (p.20)

장혁표, “대학에서의 통일교육 프로그램 운영문제”(주제발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평화통일교육연구위원회 주최 세미나 『대학에서의 통일교육방안과 대책』('94. 11. 22)

- 우리 민족의 최대의 숙원이자 최대의 관심사인 통일문제에 대하여 대학이 담당해야 할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 대학은 통일문제에 대하여 정부에 모든 책임을 돌리고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이제는 진지하게 반성해 볼 시점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

- 현재 대학에서의 통일문제연구는 사실 극히 부족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 소수의 연구 성과물도 여러 가지 문제점과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대학에서의 통일교육은 더욱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다.
- 물론 문민정부 이전까지의 정부당국이 민간부분이나 심지어 대학에서의 통일논의마저 제한하고 억제하였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학의 책임이 모두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지금부터라도 대학은 6천만 민족의 소원인 통일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제 역할을 찾아 나아가야 할 것이다.
- 그러면 대학이 민족의 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그것은 대학의 본래의 사명인 연구와 교육을 통하여 기여하는 것이다. 사회적 역사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깊이있게 연구하고 그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학생들을 교육하는 것은 그 어느 교육기관이나 정부단체보다도 대학이 가장 앞장서서 수행해야 할 임무이다. (pp.11-12)
- 대학에서의 통일교육프로그램 운영문제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지고 지켜져야 할 몇가지 원칙들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 첫째, 대학에서의 통일교육프로그램이 실효성있게 운영되고 진척되기 위해서는 통일문제 주무부처인 통일원과 교육문제 주무부처인 교육부의 유기적인 협력과 합의가 필수적이다. 양부처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나아갈 때, 실로 획기적인 통일교육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할 것이며, 힘있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 둘째, 통일원과 교육부에서 지원되는 각종 프로젝트가 좀 더 구체적인 과제와 구체적인 대상을 선정하여 지원되어야 하겠다. 지금까지는 임의의 학생이나 연구자, 연구소를 대상으로하여 경쟁의 원리에 입각하여 지원이 이루어졌으나(예:통일관련 논문 현상공모) 이제는 구체적인 대상을 선정하여 집중적인 지원이 있어야 하겠다. 이러한 집중적인 지원이 축적되면 자연스럽게 그 파급효과가 전대학내에 미치게 되고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을 고양시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 셋째, 시급히 통일교육에 필요한 교재와 강의모델 개발이 있어야 하겠다. 즉 통일교육교재와 모델개발에 연구비 지원이 집중될 필요가 있다. 이것은 향후 모든 통일교육에 있어서 토대가 되는 중요한 과제이다.
- 넷째, 통일문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연구자를 대학에서 시급히 확보하고 육성해야 한다. 지금까지와 같이 준 전문가가 아니라 오직 이 문제만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교육하는 대학교수의 확보가 필요하다. 이것은 교육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할 문제이다.
- 다섯째, 북한 및 통일관련 자료·정보의 공개이다. 정부 관련 부처에서 관계법령이나 지침을 전향적으로 정비하여 적어도 대학의 학생이나 연구자들이 자유롭게 자료·정보를 수집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pp.28-29)

박문갑,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평화통일교육연구위원회 주최 『통일대비교육 지원법 제정을 위한 세미나』 토론자료('97. 7. 3)

-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에게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한 번쯤 되돌아 볼 수 있게 하기 위해 교양필수과목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최근 연구보고서(한국정치외교사학회, 한국전쟁의 현재적 재조명과 국민의 안보의식 고찰, '97. 6)에 의하면 고교·대학생 1074명에게 “통일문제에 대한 현재의 교육이 양적으로 어떠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양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응답자가 52.0%, 약간 늘려야 한다는 응답자가 약 32.3%로 무려 84.3%가 통일교육의 확대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 대학생의 경우 특히 대폭 늘려야 한다(62.0%)와 약간 늘려야 한다(27.1%)를 포함하면 거의 90%에 가까운 대학생들은 통일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이는 현재 통일교육이 양적으로 매우 미흡하며, 통일문제에 대해서도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 이러한 학생들의 통일교육에 대한 열정을 헤아려 교양필수과목으로 설정하는 것이 대학의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만약에 전대학에 교양필수과목이 어려운 문제라면 교양과목으로 하고, 특수목적대학인 교육대학, 사범대학 그리고 교원대와 같은 교원을 양성하는 대학만이라도 교양필수과목으로 채택되어야 제2세 국민을 교육하는데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p.62)

김명기, “통일교육 접근(프로그램의 구성) 방안”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평화통일교육연구위원회 주최 『대학에서의 통일교육 개선방안에 관한 세미나』 (’95. 9. 1)

1) 통일교과목의 교양필수·지정선택과목화

- 북한학과라는 직접적 명칭의 학과 이외에는 통일교과목이 각 대학교의 교과과정상 교양필수과목이 아니며, 그나마 통일교과목과 유사한 명칭의 과목이 교양선택과목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있어 특별히 이 과목을 수강한다거나 하는 학생의 수가 극히 적으며, 심지어 수강 인원의 부족으로 인한 폐강의 결과까지 나타나고 있다.
- 부득이 이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의 대부분은 3·4학년의 고학년으로서 졸업학점을 형식적으로 매우기 위한 학점취득의 과목으로 인식하고 있고, 심지어 각 학교의 교과과정 운영상 계열별 수강과목이 제한되어 있어 그나마 수강의 기회조차도 상실되고 있는 실정이다.
- 그러므로 전체 대학생을 상대로 전반적이고 체계적인 통일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현행 교육법을 개정하여 통일교과목을 교양필수과목으로 법제도화하는 것이 시급하며, 이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각 대학에 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통일교과목 교과과정 심의위원회(가칭)’를 구성토록 정부가 적극 이를 권장하여 각 대학별로 통일교과목을 선정한 후, 이를 학과별, 계열별, 단과대학별의 구분없이 대부분의 학생이 수강하도록 최소한 지정선택과목으로 교과과정을 개편하는 것이 시급히 요구된다. (pp.53-54)

2) 북한학과의 증설 및 입학정원수 증가

- 북한학과를 전국적으로 증설하는 것이 시급하며, 이와 아울러 각 대학 당국에 대하여 북한학과의 설치 및 정원수의 확대와 주간학 부에의 설치를 적극 권장하거나 이에 대한 인가를 완화하는 것도 시급히 요구되는 사항이다. (p.54)

3) 보조사업의 활성화

- 보조대상인 학교의 수를 65개 대학에 한정하지 말고 전국의 모든 대학과 전문대학까지도 포함하도록 그 대상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 학술세미나 이후의 결과를 통일원이 주관하여 하나의 전문학술지로서 연구결과보고서를 발간하여 이를 전국대학교 또는 관련 연구기관에 배포하여 연구결과를 상호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모색해 볼 수 있다.
- 대학별 학술발표회와는 별도로 전국에 걸친 교수 및 관계전문가의 전국대회 규모의 학술발표를 통해 그것이 응집되어 통일문제의 현 주소를 종합진단하고, 새로운 문제점 제시 및 이의 해결방안, 대책 방안 등을 도출하여 이를 정책에 직접 반영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전국적 전문통일학술연구 발표대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 매년 특정대학의 우수연구소를 선정하여 이를 중점적으로 지원·육성하여 특수분야의 전문적인 연구소로 발족시키고 신진학자를 위해 유급직원연구원 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 예산의 폭을 대폭 늘려야 하며, 그 예산의 축을 대폭 늘리는 방안에는 통일원의 보조금의 예산증액도 중요하지만, 각 대학이 이에 예산을 배정하여 총·학장, 교내 교수, 그리고 학교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도모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pp.57-58)

4) 대학생 통일심포지움의 개방화 및 다양화

- 현재의 대학별로 2~3명 정도로 선발하여 전국 100여명에 걸친 심포지움의 형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참가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며, 그 형태도 다양해야 할 것이다.
- 첫째, 그 참가의 범위를 대학생뿐만 아니라 대학원생, 전문대학생까지 확대 개방해야 한다.
- 둘째, 심포지움의 형태를 ‘학교별 대학생 통일심포지움’ ‘학교별 대학원생 통일심포지움’ 그리고 ‘학교별 전문대학생 통일심포지움’ 등으로 세분화·다양화해야 할 것이다.
- 셋째, 학교단위의 심포지움을 개최한 후 이를 더욱 발전시켜 전체적인 규모의 ‘전국대학생 통일심포지움’ ‘전국대학원생 통일심포지움’ ‘전국전문대생 통일심포지움’으로 이를 확대·발전시켜 전국적인 대단위 규모의 심포지움을 하는 것이 요구된다.
- 넷째, 위와 같은 심포지움의 결과를 통일원이 총괄 수집하여 ... 종합보고서의 형태로 발간·배포하여 중국에는 이를 전국 대학생, 대학원생, 그리고 전문대생들의 통일논의에 대한 관심과 통일논의에 대한 일관성 유지에 필수불가결한 지침서로 적극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pp.58-59)

5) 통일연구소장 회의의 기능 강화

- 통일원은 통일연구소장 회의에 통일교육의 이념·목표·내용·방법·환경 등 통일교육 전반에 걸친 오늘의 상태를 보다 나은 미래의 상태로의 개선에 일조할 수 있는 여건과 권한을 부여하여 통일연수원wkd 회의가 교육현장에서의 체험 및 실제 이를 종합·논의하는 기관으로 자리잡아 그 결과를 정책에 건의·반영하는 책임있는 기관으로 발족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이 요구된다. (p.60)

6) 교수논문집의 발간

- 전문적인 교수논문집의 발간이 없는 관계로 교수들의 통일문제에 관한 연구를 발표할 기회가 없는 실정이어서 전문적인 교수논문집의 발간이 요구된다. 이에 관한 방안으로서는 그 논문집을 월간으로 정기적으로 발간토록하여 연구의 결과를 수시로 발표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과 그 저변의 다변화가 요구된다. (p.62)

7) 학생논문현상 모집

- 선정인원의 확대 : 현재까지 ‘전국대학생 통일논문현상공모’의 최종적으로 선정하여 시상하는 인원수는 최우수작 1편, 우수작 2편,佳作 5편을 포함하여 총 8명이다. 대학생들의 통일문제에 관한 참여와 관심의 폭을 대폭 늘리기 위하여는 그 선정대상도 이에 따라 대폭 늘리는 것이 요구된다. 아울러 그 선정대상 학생수를 전국 각 대학교의 학생수 비율에 따라 배분·조정하여 시상에 공동화를 기할 것도 요구된다.
- 주제의 다양화 : 현재의 지정된 주제선택을 지정논제화하지 말고 이를 ‘지정과제’와 ‘자유과제’로 분류하여 주제선정의 폭을 개방시키는 것임. 주제선정의 다양화를 통해 전체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인식의 변화 추이, 이를 통한 통일이념, 목적, 방법을 공개·개방하여 참신하고 긍정적인 의견·방안을 수렴할 수 있다는 점이다.
- 주제의 구체화 : 대학생통일논문공모의 주제선정에 있어서 통일원에서 지정하는 과제는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바, 이를 구체화하고 각론화하여 통일정책의 이행방법 및 통일의 요건으로서 확립할 필요성이 있다. ... 이는 나아가 통일교육에 있어서 통일에 대한 인식의 구체화와 관심의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pp.65-66)

8) 통일신문 발간

- 대학별 통일신문 발간 : 일반 학생들의 객관적인 통일에 관련한 기사 및 소식을 접할 수 있게 하거나 통일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기회의 제공을 위한 대학별 통일신문을 발행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대학의 재정상 그 실현이 어려우면 기존의 대학신문의 지면 중 최소 1면을 통일란으로 할애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절차면에 있어서 해당 연구소가 이를 주관하고 이를 통일원이 관장하는 공동발간의 절차를 두는 것이다. 또한 당해 연구소의 운영위원이 기획을 한 후 편집위원은 학생 및 교수가 공동으로 구성되어 게재되는 원고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하여 발간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유지함이 필요할 것이다. 발간회수는 주간·월간 등의 형태를 띠어도 무방하리라 본다.
- 통일속보의 발간 : 전국의 모든 대학생을 상대로 하는 통일속보를 부정기적으로 간행하여 모든 대학생에게 통일관련 소식지를 신속히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pp.68-69)

9) 통일대동제

- 통일대동제 승인의 적극적 자세
 - 첫째, 정부는 남·북한간의 다각적 교류협력을 실현·확대하려는 정부의 입장에서 가능한 한 북한대학생의 접촉을 승인하는 범위를 넓히고 대학생들의 교류를 전향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 둘째, 정부는 정부의 시책과 대립된 입장을 가진 대학생들이라 하더라도 대학생으로서 학문·학술활동이 남북한 교류사업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설득, 협조적 관계를 설정하여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야 한다.

- 셋째, 남북한간의 대결의식을 고취하고 상대방을 적으로 규명하는 법률적·제도적 장치를 폐지하고 그대신 교류·협력의 증폭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보장한다.
- 넷째, 정부는 대학과 대학생간의 교류가 성사될 수 있도록 정부간의 공식적 접촉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예컨대 설사 제3국을 통해서라도 대학간 학술교류나 방학기간의 상호방문 프로그램, 대학과 대학간의 자매결연 프로그램 등을 개발·시행한다. (pp.72-73)

10) 통일관련 시상

- 시상인원의 증대 : 통일문제에 관련된 시상은 그 빈도수는 둘째라 하더라도 그 대상을 전국의 대학생으로 하는 것보다, 이를 대학별로 대상인원을 배당하여 이를 수상케 하는 것이다. 이는 참여도에 있어서의 소극적 태도를 개선시키는 점에서 좋은 면을 갖고 있다.
- 시상종목의 증대 : 교내외의 통일연구 모임에 공헌한 학생, 통일논문을 발표한 학생, 학생심포지움에서 공을 세운 학생, 참신한 통일제안을 한 학생 등에게 각종의 시상종목을 정부·대학이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pp.74-75)

김태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평화통일교육연구위원회 주최 『대학에서의 통일교육 개선방안에 관한 세미나』 토론자료('95. 9. 1)

- (김명기 교수의 논문중:정리자註) 통일교과목을 모든 학생이 수강해야 하는 교양필수로 하는 문제는 다소 지나친 감이 있다. 남북통일이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볼 때, 대학사회에서 통일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학생들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고 강제적이고 독점적으로 운영될 경우, 경직되고 형식적인 교과운영이 불가피해지며, 이

로 인해 얻는 것보다 폐단이 더 많이 나타날 수 있음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p.227)

박용헌,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화방안”(주제발표), 통일원 주최 세미나 『통일환경 변화와 통일교육 발전방향』(94. 12. 13)

□ 대학통일교육을 교양필수·선택과목으로

- 대학에서 교양필수로 부가해 왔던 『국민윤리』 교과를 폐지한 이후 사실상 대학에서 통일교육을 실시할 여지는 거의 없어진 바와 같다. 적절한 새로운 명칭의 교과(예: 한국정치, 북한연구, 시민성과 윤리, 시민성과 지도성 등)를 설정하고 이를 교양필수 내지 선택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예시해 볼 수 있다.
-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교육 과정에는 통일교육을 필수화하고 공무원 임용 및 승진 시험과목 중에 필수로 과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p.18)

김갑철, “통일교육을 위한 교수양성 및 교재개발 방안”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평화통일교육연구위원회 주최 『대학에서의 통일교육 개선방안에 관한 세미나』(95. 9. 1)

□ 통일교육 담당교수 확보방안

- (목표문화) 교양과정의 모든 과목의 강의는 반드시 전임교수가 전담하도록 해야 한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학생의 가치관 정립, 통일교육과 관련된 교과목은 예외없이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하여금 교수토록 해야 한다.

- (추진주체) 전술한 ‘통일교육본부’ 설치법에 의거 대학총장 밑에 ‘대학 평화통일교육위원회’(가칭)을 두어 추진한다. 동 위원회는 총장 또는 부총장을 위원장으로하여 교무처장, 기획조정처장, 학술진흥처장, 통일문제연구소장, 통일교육담당교수 등으로 구성한다.
- (제도적장치) 통일교육 유관 교과목은 1999년에 제2학기부터 지정 교양으로 개편하여 2학점, 1998년에 4학점, 1999년에 6학점으로 지정하는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이 권고는 대학의 준비상태를 고려하여 통일교육본부, 교육부, 대학교육협회의 협의하에 통일교육에 관한 몇 개의 MODEL을 개발, 대학에 통보하고, 대학은 대학 통일교육위원회의 협조로 효율화방안을 도출, 실천한다. (pp.90-91)

1) 장기대책

- 충원계획 수립 : 민족통일교육본부, 교육부, 대학교육협회가 협동하여 대학의 통일교육 담당교수 충원계획을 수립gksek. 이 충원 계획에는 2003년 목표년도의 총 소요인원과 연차별 양성계획, 예산 등이 포함된다.
- 선발 : 교육본부는 다음과 같은 통일교육 유사 학과목의 박사학위 소지자 중에서 연차별 충원계획 인원의 120%를 선발한다. 초과된 20%는 자연감소에 대비한 것임.
 - 대상학과목 : 정치학, 경제학, 행정학, 법학, 사회학, 교육학, 철학, 현대사 및 여타 유사과목
- 교육/훈련 : 2년간의 Post-Doctor Course 로 하고 이수학점은 36 학점으로 함(36학점 중 24학점은 학과목, 12학점은 실습과 훈련) Post-Doctor Course 는 두가지 길이 있음. 하나는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에서 필요학점을 취득한 후, 실습과 훈련은 교육본부에서 실시하는 방안이고, 또하나의 교육본부가 특정 대학과 계약을 체결, 교수와 교재를 공급하고, 실습과 훈련도 그 대학에서 실시하는

방법이다. 누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는 교육본부, 대학교육협의회, 교육부가 협의 구성한 '통일교육 교수분과위원회(가칭)'에서 토의 결정한다.

- 경비 : 수업료 및 최저생활비는 정부 예산으로 충당한다.
- 배치 : 본인의 희망, 대학의 요구 등을 고려하여 배치하며, 학교재정이 취약한 사립대학의 경우는 국가의 적절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p.92)

2) 단기대책

- 1997년 제2학기부터는 통일교육 단기과정을 수료하지 않은 자는 통일교육관련 교과목의 강의를 맡을 수 없음. 단기과정의 기간은 4개월로 한다.(하계 2개월, 동계 2개월)
- 대학통일교육위원회는 통일교육 관련 교과목을 현재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예정인 강사들 가운데서 적정인원을 선발하여 통일원 산하 통일연수원이 개설할 '통일교육 단기과정'을 수료토록 해야 한다.
- 단기과정은 다음 강좌를 개설하고, 교수진은 최고수준의 전문가로 위촉함. 단기과정은 실습을 포함, 16학점 이상 취득해야 한다.
 - 여름학기 : 북한정치(2), 북한경제(2), 북한통치이데올로기와 정치교육, 민족통일론, 공산체제의 변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강의 실습...
 - 겨울학기 : 북한사회(교육, 문화), 북한의 통일전략, 강대국과 한반도, 북한의 외교정책, 통일국가 모형, 북한체제 변화분석, 민족대통합론(정치통합론), 강의실습...
- 단기과정 재학생에게 연구비와 교통비를 지급함.

- 단기과정 수료자가 전향의 Post-Doctor Course 에 진학코자 할 때는 필요한 혜택을 줄 수 있다. (pp.92-93)

□ 대학 통일교육 교재개발 방안

1) 통일교육 교재 MODEL 연구

- 통일교육 교수 모듈(module) 연구 : 이 작업은 통일원 관련 전문가, 대학교육협의회(평화통일교육위원회), 통일교육 유관학회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교수모듈 작성팀이 맡아 추진한다. 이 모듈은 총합편(종합편), 또는 각론(각 분야별 단행본)의 개념구도, SYLLABUS, 주요개념의 풀이, 참고문헌의 해제, 교수방법 등을 담는다. 이 작업팀은 3-4회의 워크숍을 거쳐 A, B, C 등 몇가지 모델을 작성한다.

2) 교재 집필 위촉

- 이미 개발한 교수모듈에 의거 통일교육 유관 학회, 예컨대 한국국민윤리학회, 대학이념교육교수협의회, 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정치학회 등에 프로젝트 베이스로 집필 의뢰한다.

3) 검토/발행

- 원고 검토는 교수모듈 작성팀이 맡아 책임 감수하고, 교재는 학회 이름으로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인세는 집필한 학회로 하여금 처분토록 하되 최소한 매 2년마다 개정판을 내도록 한다. (p.96)

김태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평화통일교육연구위원회 주최 『대학에서의 통일교육 개선방안에 관한 세미나』 토론자료('95. 9. 1)

□ 김갑철교수 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 (김갑철 교수의 논문에서와 같이:정리자註)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 하나의 교재를 개발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가르치는 사람에 따라 여러 가지 참고자료를 활용하여 교육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통일원, 민족통일연구원, 통일연수원, 외교안보연구원 등이 펴내고 있는 각종 보고서, 참고자료나 책자 등을 시중에서 판매할 필요가 있다.

- 현재 시중서점에는 환상적인 통일관에 젖어 감상적으로 쓴 통일관계 책자들이 범람하고 있으며, 이런 책자들이 젊은 학생들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그러므로 정부기관에서 출판하는 통일내지 북한관계 책자들을 좀더 쉽고 읽기 좋게 만들어서 시중에 판매한다면 젊은 학생들이 균형있는 시각을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학통일교육의 참고자료로 쓸 수 있을 것이다. (pp.229-230)

15. 사회통일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한만길, “통일교육과 시민교육의 실태와 접근방향”(주제발표) 민족통일연구원 주최 전문가 워크숍 『통일교육의 활성화와 남북한 사회통합』 ('97. 4. 28)

□ 사회통일교육 유형구분

- 통일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을 보면 형태상으로 정부 주도형, 정부지원형, 민간주도형, 종교기관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 정부주도형은 통일원 산하의 통일연수원이 중심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정부 각 부처의 교육원 또는 연수원에서 공무원 연수의 일환으로 부분적으로 통일문제를 다루기도 한다.
 - 정부지원형은 정부의 통일정책을 자문하거나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유총연맹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기관에서도 일반국민과 교원, 학생, 청소년을 대상으로 통일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민간주도형은 시민사회단체 또는 청소년단체에서 독자적이며 자율적으로 통일교육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형태를 말한다. 시민단체는 단체의 목적과 활동내용에서 다양한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성격을 명확하게 정리해서 말하기는 어렵다. 경실련의 통일협회에서 펴낸 자료에 의하면 통일관련 민간단체의 숫자는 무려 171개에 이르고 있다. 이 가운데 대학과 민간의 통일연구소를 제외하면 절반정도인 80여개 단체로 추정할 수 있다.
 -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통일교육프로그램도 다양하다. 대체적으로 종교단체는 통일에 관한 교육이라기 보다는 종교운동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 (p.7)

□ 사회통일교육의 문제점

- 통일교육의 방향과 목표가 교육기관의 성격에 따라서 서로 상이할 뿐만 아니라 체계화되어 있지 않다.
- 사회교육은 대상자가 다양하고 교육방법도 다양하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일관성과 체계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 사회통일교육의 지원체계에서도 학교 통일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 동일한 문제를 들 수 있다. 즉 사회교육을 통하여 통일교육을 추진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려면 양성과정 또는 연수과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전문가 연수과정은 통일연수원을 제외하면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갖고 운영하는 기관은 없다. 또한 통일교육 자료개발도 산발적이며 전문성을 띠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p.7)

민주평통, “중·고교생의 통일교육 활성화방안”(주제발표), 민주평통 주최 1/4분기 통일정책포럼('96. 3. 26)

- 국내외적 상황변화에 따른 적극적 대응 미흡 : 지금까지 추진해온 통일교육의 목표와 내용체계는 일관된 패러다임에 의해 전개되기 보다는 『체제우위경쟁』, 『정권안보』라는 수단적 기능성격이 오히려 부각
- 통일교육현장의 정서 불고려 : 명분상으로는 민족간의 화해와 평화를 추구한다고 하면서도 실제 교육현장의 일반적 정서나 교육내용은 『반공』이라는 감상적·정체적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제기
- 6·25전쟁을 경험한 50대 이상의 기성세대는 탈냉전이후 환경변화에 적응하기보다는 『적색혐오증』이라는 대북이미지가 고정된 경우도 없지 않음.

- 사회통일교육의 일관성 결여 : 사회통일교육 추진기관이나 지원관리체제에 있어서도 정권에 따라 지속성과 일관성이 결여되어 때로는 혼란과 중복을 야기
 - 북한의 정치사회화교육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일관되게 추진되는 이념, 내용, 방법, 추진체를 전제한 종합적 대비책의 미흡
 - ※ 현재 민주평통을 비롯하여 통일원, 자유총연맹 등에서 교육을 맡고 있으나 사회교육 차원에서 보다 확대 바람직
- 민주시민윤리·민족통일가치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미흡 : 분단국가에서의 분단극복을 위한 정책추진의 일환으로서 사회통일교육을 본질적으로 정치교육 영역으로 포함시켜야 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pp.24-25)

16. 사회통일교육 개선방향

민주평통, “중·고교생의 통일교육 활성화방안”(주제발표), 민주평통 주최
1/4분기 통일정책포럼('96. 3. 26)

- 그동안의 사회통일교육이 주로 지식의 축적과 정보전달에만 치중해왔음을 상기할 때 사회통일교육의 목표는 건전한 시민의 양성을 통한 민주사회 구현 및 통일시대에 필요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격 구비가 요체가 되어야 할 것임.
- 또한 그러한 방안들은 일회성운동의 경향이나 하향식 추진방법을 가능한한 지양하고 개방적이고 자연스러운 대국민 홍보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통일교육의 일관성, 통일성, 계속성 부여 측면에서 관련자료와 교육방법을 개발할 전담기구 필요
 - 교육자료의 개발과 보급, 사회교육을 담당하고 각종 사회교육기관과의 협력, 조정 기능 등을 수행할 기구의 신설이나 기존의 기구확충이 필요하다고 하겠음.(예: 한국민주시민교육협의회 기능 확대)
- 대중매체의 적극적 활용과 현장교육효과의 극대화 모색
 - 통일관련 이슈에 관한 언론의 보도나 탐구가 순식간에 일반 국민의 통일관에 지대한 영향을 초래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언론의 여론형성과 여론주도의 기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국가안보 및 이익에 치명적 손실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내에서 관련정보를 과감히 공개하는 것도 검토

○ 사회통일교육과정상에 있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는 먼저 남북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바탕위에서 상대방에 대한 사실적 정보가 공유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노력 필요

- 현시점에서 남북한의 정보공동체 형성이 시급

※ 특정기관이나 방송을 통한 정보로 남북한을 이해하기에는 난점

→1987년 교육개혁심의회 최종보고서에도 언급 (pp.25-28)

< 원 문 목 록 >

1. 김갑철, “통일교육을 위한 교수양성 및 교재개발 방안”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평화통일교육연구위원회 주최 『대학에서의 통일교육 개선방안에 관한 세미나』(’95. 9. 1)
2. 김동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평화통일교육연구위원회 주최 『통일 대비교육지원법 제정을 위한 세미나』 토론자료(’97. 7. 3)
3. 김명기, “통일교육 접근(프로그램의 구성) 방안”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평화통일교육연구위원회 주최 『대학에서의 통일교육 개선방안에 관한 세미나』(’95. 9. 1)
4. 김명한, 중앙대학교 민족발전연구원 주최 통일정책대토론회 『민족동질화를 위한 통일교육의 방향』 토론자료 (’97. 1. 28)
5. 김민하, “민족이질감 극복을 위한 학교 통일교육의 확립”(기조연설), 중앙대학교 민족발전연구원 주최 통일정책대토론회 『민족동질화를 위한 통일교육의 방향』(’97. 1. 28)
6. 김민하, “통일을 대비하는 미래지향적 통일교육의 확립”(기조발표), 중앙대학교 민족발전연구원 주최 통일정책대토론회 『통일교육의 현황과 과제』(’96. 11. 26)
7. 김주성, “민주시민교육의 방향과 개혁과제”(주제발표), 대통령자문 교육개혁위원회 주최 제11차 공청회 (’96. 11. 27)
8. 김태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평화통일교육연구위원회 주최 『대학에서의 통일교육 개선방안에 관한 세미나』 토론자료(’95. 9. 1)
9. 김희대, 중앙대학교 민족발전연구원 주최 통일정책대토론회 『민족동질화를 위한 통일교육의 방향』 토론자료 (’97. 1. 28)

10. 문용린, “통일교육의 방향과 주요내용”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평화 통일교육연구위원회 주최 『대학에서의 통일교육 개선방안에 관한 세미나』('95. 9. 1)
11. 민병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평화통일교육연구위원회 주최 『대학에서의 통일교육 개선방안에 관한 세미나』 토론자료('95. 9. 1)
12. 민병천, “대학에서의 통일대비교육방안과 대책”(주제발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평화통일교육연구위원회 주최 『대학에서의 통일대비교육방안에 관한 세미나』('96. 10. 18)
13. 민병천, “학교 통일교육의 방향”(주제발표), 중앙대학교 민족발전연구원 주최 통일정책대토론회 『민족동질화를 위한 통일교육의 방향』('97. 1. 28)
14. 민주평통, “중·고교생의 통일교육 활성화방안”(주제발표), 민주평통 주최 1/4분기 통일정책포럼('96. 3. 26)
15. 박강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평화통일교육연구위원회 주최 『대학에서의 통일대비교육방안에 관한 세미나』 토론자료('96. 10. 18)
16. 박문갑,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평화통일교육연구위원회 주최 『통일대비교육지원법 제정을 위한 세미나』 토론자료('97. 7. 3)
17. 박용현, “남·북한 대학교육내용의 동질성과 이질성”(주제발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평화통일교육연구위원회 주최 『대학에서의 통일대비교육방안에 관한 세미나』('96. 10. 18)
18. 박용현,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화방안”(주제발표), 통일원 주최 세미나 『통일환경 변화와 통일교육 발전방향』('94. 12. 13)
19. 박재규, “남북한 대학간 학술교류 방안”(주제발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평화통일교육연구위원회 주최 세미나 『남·북한 대학교육 교류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96. 4. 26)

20. 박홍, “남북한 대학총장 회담 추진방안”(주제발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평화통일교육연구위원회 주최 세미나 『남·북한 대학교육 교류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96. 4. 26)
21. 배찬복, “대학생 통일운동의 목표와 논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평화통일교육연구위원회 주최 『대학에서의 통일교육 개선방안에 관한 세미나』('95. 9. 1)
22. 사기태, 중앙대학교 민족발전연구원 주최 통일정책대토론회 『민족동질화를 위한 통일교육의 방향』 토론자료 ('97. 1. 28)
23. 서재진, “북한학생의 가치관 변화와 교육적 시사”(주제발표), 한국교육개발원 주최 제2회 통일대비교육포럼('96. 11. 29)
24. 신창민, “대학에서의 바람직한 통일운동 방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평화통일교육연구위원회 주최 『대학에서의 통일교육 개선방안에 관한 세미나』('95. 9. 1)
25. 어창웅, 중앙대학교 민족발전연구원 주최 통일정책대토론회 『민족동질화를 위한 통일교육의 방향』 토론자료 ('97. 1. 28)
26. 유석렬, 중앙대학교 민족발전연구원 주최 통일정책대토론회 『통일교육의 현황과 과제』 토론자료('96. 11. 26)
27. 이경숙,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평화통일교육연구위원회 주최 『통일대비교육지원법 제정을 위한 세미나』 토론자료('97. 7. 3)
28. 이기택, “대학에서의 통일교육운영실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평화통일교육연구위원회 주최 『대학에서의 통일교육 개선방안에 관한 세미나』('95. 9. 1)
29. 이상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평화통일교육연구위원회 주최 『대학에서의 통일교육 개선방안에 관한 세미나』 토론자료('95. 9. 1)

30. 이서행, “통일교육 내용의 재정립방향”(주제발표), 통일원 주최 세미나 『통일환경 변화와 통일교육 발전방향』(’94. 12. 13)
31. 이영선, “통일교육법 제정에 따른 통일교육체제의 개선방안”(주제발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평화통일교육연구위원회 주최 『통일대비교육지원법 제정을 위한 세미나』(’97. 7. 3)
32. 이우영, “대학통일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주제발표), 연대 통일연구원 주최 『통일교육에 관한 심포지움』(’97. 5. 2)
33. 이우영, “새로운 통일교육 프로그램”(주제발표) 민족통일연구원 주최 전문가 워크숍 『통일교육의 활성화와 남북한 사회통합』(’97. 4. 28)
34. 이태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평화통일교육연구위원회 주최 『통일대비교육지원법 제정을 위한 세미나』 토론자료(’97. 7. 3)
35. 장명봉,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입법화의 요청”(주제발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평화통일교육연구위원회 주최 『통일대비교육지원법 제정을 위한 세미나』(’97. 7. 3)
36. 장명봉, “통일교육법의 제정의 필요성과 내용 검토”, 북한학 연구 및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대학-민족통일연구원간 워크숍 발표논문 (’97. 7. 25)
37. 장영길, 중앙대학교 민족발전연구원 주최 통일정책대토론회 『민족동질화를 위한 통일교육의 방향』 토론자료 (’97. 1. 28)
38. 장청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평화통일교육연구위원회 주최 『대학에서의 통일교육 개선방안에 관한 세미나』 토론자료(’95. 9. 1)
39. 장혁표, “대학에서의 통일교육 프로그램 운영문제”(주제발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평화통일교육연구위원회 주최 세미나 『대학에서의 통일교육방안과 대책』(’94. 11. 22)

40. 전득주, “대학 통일교육의 현황과 과제”(주제발표), 중앙대학교 민족발전연구원 주최 통일정책대토론회 『통일교육의 현황과 과제』('96. 11. 260)
41. 정용석, “통일교육의 효과적 실시방법 모색”(주제발표), 통일원 주최 세미나 『통일환경 변화와 통일교육 발전방향』('94. 12. 13)
42. 정용석, “대학생의 통일운동 유형과 선도방안”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평화통일교육연구위원회 주최 『대학에서의 통일교육 개선방안에 관한 세미나』('95. 9. 1)
43. 조영달, “통일시대의 민주시민교육-민주시민교육의 강령과 교육모형 탐색”(민주시민교육 방향정립을 위한 국민대토론회 『민주시민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주제발표문, '94. 10. 8)
44. 최성철, “통일교육 내실화를 위한 입법의 필요성과 제정방향”(주제발표), 통일원 주최 『통일교육법 관련 워크샵』('96. 12. 26)
45. 최영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평화통일교육연구위원회 주최 『대학에서의 통일교육 개선방안에 관한 세미나』 토론자료('95. 9. 1)
46. 최영표, “중·고교생의 통일교육 활성화방안”(주제발표), 민주평통 주최 1/4분기 통일정책포럼('96. 3. 26)
47. 한만길, “통일교육과 시민교육의 실태와 접근방향”(주제발표) 민족통일연구원 주최 전문가 워크샵 『통일교육의 활성화와 남북한 사회통합』 ('97. 4. 28)
48. 한만길, “학생의 건전한 통일관 형성을 위한 교육방안”(주제발표), 한국교육개발원 주최 제1회 통일대비교육포럼('96. 10. 30)
49. 황병덕, 중앙대학교 민족발전연구원 주최 통일정책대토론회 『민족동질화를 위한 통일교육의 방향』 토론자료 ('97. 1. 28)

< 통일교육 관련 세미나 개최현황 >

1. 한국사회과교육학회, 민주시민교육 방향정립을 위한 국민대토론회: 민주시민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94. 10. 8)
2.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에서의 통일교육 방안과 대책 ('94. 11. 22)
3. 통일원, 통일교육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성 세미나: 통일환경 변화와 통일교육 발전방향 ('94. 12. 13)
4.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에서의 통일교육 개선방안에 관한 세미나 ('95. 9. 1)
5. 한국사회과교육학회, 민주시민교육 방향정립을 위한 학술토론회: 지방의 세계화와 시민교육 ('96. 5. 19)
6.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96.1/4분기통일정책포럼: 중·고교생의 통일교육 활성화방안 ('96. 3. 26)
7.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남·북한 대학교육 교류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 ('96. 4. 26)
8. 한국자유총연맹, 자유·민주·통일 학술세미나: 국민안보의식 실태와 향후대책 ('96. 9. 13)
9.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에서의 통일대비교육 방안에 관한 세미나 ('96. 10. 18)
10. 한국교육개발원, 제1회 통일대비교육포럼: 학생의 건전한 통일관 형성을 위한 교육방안 ('96. 10. 30)

11. 중앙대 민족발전연구원, 통일교육의 현황과 과제 ('96. 11. 26)
12. 대통령자문 교육개혁위원회, 제11차 공청회: 민주시민교육의 방향과 개혁과제 ('96. 11. 27)
13. 한국교육개발원, 제2회 통일대비교육포럼: 북한학생의 가치관 변화와 교육적 시사 ('96. 11. 29)
14. 중앙대 민족발전연구원, 민족동질화를 위한 통일교육의 방향 ('97. 1. 28)
15. 한국교육개발원, 제3회 통일대비교육포럼: 남북한주민의 의식구조 격차와 통일교육에의 시사점 ('97. 4. 18)
16. 민족통일연구원, 전문가워크숍: 통일교육의 활성화와 남북한 사회통합 ('97. 4. 28)
17. 연세대 통일교육원, 통일교육에 관한 심포지움 ('97. 5. 2)
18. 군산대 현대이념연구소, 통일문제 학술세미나: 남북교류와 통일방안 ('97. 6. 4)
19. 한국교육개발원, 제4회 통일대비교육포럼: 북한 김정일의 교육정책과 현실, 그리고 통일교육의 과제 ('97. 6. 24)
20.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통일대비교육지원법 제정을 위한 세미나 ('97. 7. 3)
21. 민족통일연구원, 북한학 연구 및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1차 민족통일연구원-대학(원) 집중워크숍 ('97. 7. 24)
22. 한국정치학회, 세계정치학회 17차 서울세계대회 동시학술회의: 세계화와 민주화시대의 정치와 교육 ('97. 8. 19)

統一教育關聯 論議 資料集

1997年 11月 日 印刷

1997年 11月 日 發行

發行處：統 一 院
